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인가?

30주년을 바라보다
윤경로 고문 인터뷰

이슈리포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인터뷰

우리들이야기
동지내몰림 시리즈 - 세운재개발 세입자



커버스토리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며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하기보다 밥그릇 챙기기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의 고인 물을 갈아엎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인가?



CONTENTS

동승동 칼럼

06 시대의 과제, 재벌과 고장난 투기근절제도 개혁 / 윤순철

신년인사

08 30살 회원 / 박희연, 정의호, 정지훈

30주년을 바라보다

11 경실련이 문대! 윤경로 고문 인터뷰 / 윤은주

이슈리포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인가?

20 ①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 조진만

25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 서희원

30 ③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서희원

2019 재벌개혁

36 2019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 문제를 알리요!” / 권오인

2019 토지공개념

39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 장성현



11 30주년을 바라보다
윤경로 고문 인터뷰



30 이슈리포트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경실련 |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중앙위원회의장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 채원호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발행 2019년 1월 23일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omepage : <http://www.ccej.or.kr>

시사포커스

- 41 ①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 정지웅
- 46 ②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 양문수

지역이야기

- 50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 용균이에게 / 김중헌

우리들이야기

- 53 ① 동지내몰림 시리즈 - 세운 재개발 세입자 / 윤은주
- 59 ②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기업 - 노리소리 강원두레 인터뷰 / 윤은주
- 63 ③ 인턴 후기 - 완벽하진 못했어도 후회 없는 시간들 / 강예진
- 65 ④ 문화산책 - K-POP에 대한 인식 고찰 / 김건희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 67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68 경실련 일일보고
- 72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53 우리들 이야기
동지내몰림 시리즈
세운 재개발 세입자 인터뷰



59 우리들 이야기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기업
노리소리 강원두레 인터뷰

시대의 과제, 재벌과 고장난 투기근절제도 개혁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으로 민주복지사회’ ‘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 주거안정’ 1989년 11월 4일 정동문화체육관에 내걸린 <경실련 창립총회 및 제2차 토지공개념 강화입법과 주택문제 해결 촉구 시민대회>에 내걸린 구호입니다. ‘경실련’의 원래 이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데 이 긴 이름은 경실련 준비모임에서 오랜 논쟁 끝에 채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의 제안이 있었으나 부동산 투기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근본적인 목표로서는 너무 협소하여 ‘경제정의’가 운동의 목표로 채택되었고 이를 이름으로

결었습니다. 경제정의는 당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경제 불의였고,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로 정치적 문제를 다루던 사회단체와는 다른 영역에서 운동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고, 실사구시 원칙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만들고 제시한다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의 적용,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불평등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경제 불의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땅과 집의 정의로운 실현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1989년 7월 8일 서울YWCA 강당에서 열린 발기인대회 선언문에서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화,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폭등 및 노사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로 “1)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3)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5)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6)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를 제시하

였습니다. 초대 공동대표를 맡으신 변형운, 황인철, 이효재, 송월주님의 지휘로 재벌 개혁, 재벌과 정권의 유착 근절, 토지공개념 조기 입법화,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국공유지 확대, 영구임대주택 확대, 임대료 인상 규제,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실시를 정책 대안으로 내놓으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정책 개혁운동은 시민들과 현장에서 이뤄졌는데, 서초동 검찰청사 앞 꽃마을에서 철거민들과 성탄절 촛불예배를, 재벌과 자산가 5%의 로비에 맞서 95% 시민의 역로비를 선언하고 의정감시단을 국회에 보내 지연되는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폭등하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두 달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17명의 세입자를 위해 합동추모제 열고 위패를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실태 공개와 재벌에 대한 감사 중단 압력을 폭로한 시대의 양심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석방 운동 등 다양한 현장이 개혁의 공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실련 창립 30년입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될수록 역사에서 사라져야할 소명입니다. 어느 단체이든 20년, 30년을 기념하고 성과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부끄럽습니다. 경실련의 회원, 전문가, 자원봉사자, 상근활동가들은 나름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30년 전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경제 불의 해소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는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고,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빈곤과 양극화는 더 커졌으며,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소멸시킴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드는 투기와 불로소득의 비윤리적 자산 축적이 만연합니다. 2018년 기준, 0.3% 재벌대기업은 매출액의 48%, 영업이익의 61%를 차지하였습니다. 번창한 재벌 대기업의 친족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골목 빵집과 커피집까지 장악하였습니다. 최근 10년, 재벌 대기업들은 10억 평(8억 평→18억 평)의 토지 사재기를 통해 약 1500조원의 자산을 늘렸습니다. 다주택자 상위 1%(14만 명)은 2배 이상(3.2채→6.7채)의 주택을 늘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컵라면을 먹으면서 지옥같은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엄중함에도 촛불정신을 실현한다는 정부는 재벌의 터럭 한끝조차 손대지 못하고, 고의로 고장 낸 부동산 투기근절제도의 정상화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초심을 돌아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혁신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의 탈세를 근절하는 문제에 전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이끌며 시민들의 개혁 소리를 힘차게 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30살 회원들이 전하는 새해 새 소망



박희연 회원



경실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 박희연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회사를 옮기고 일이 바빠 해가 바뀐 것도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2019년이 저도, 경실련도 30살이 된 해라서 새해 소망 원고를 부탁한다는 간사님 연락을 받고 올 기해년이 저에게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갓 1년 넘은 새댁으로,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신혼집은 없거든요. 공시지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경실련 덕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헛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소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저임금 문제 등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있지만 경실련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믿으며 경실련 회원으로 경실련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님들과 경실련 관계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실련과 나이가 같은 올해 서른 살 된 회원들의
신년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세가 된 경실련 회원 정의호라고 합니다. 경실련과는 대학시절 인턴활동을 하며 좋은 영향을 받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인데, 서른이라고 하니 뭔가 어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여가시간에도 독서, 운동을 하거나 여행으로 견문을 넓힌다면 연말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어린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싸우고,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등 사람들은 매일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



정의호 회원

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경실련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람과 집단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마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 모두 정의 넘치는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정지훈 회원

안녕하세요.
만나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대학원에서 윤리를 전공하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평등, 질병 등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인문학이 사회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며, 경실련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었고 어느덧 기해년 새해도 열흘이나 지났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8월 사실상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기나긴 탐색과 방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살이 된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진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의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만절필동(萬折必東)이란 말이 있어요. 남북문제도 지난 70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겠지만 결국은 마치 황하(黃河)가 수백, 수천 번 굴절하며 막히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동해(東海)로 흘러가듯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여요.”
(윤경로 고문)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dongj78@ccej.or.kr



▲ 지난 1월 14일 무악재역 인근에서 윤경로 고문을 만났습니다.

올해 경실련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월간 경실련에서는 특집 인터뷰로 고문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실련이 꼭 만나야 할 분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경실련 초기 상임집행위원장,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회> 기억기념분과 위원장과 4.19혁명 유공자 심사위원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윤경로 고문을 찾았습니다.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 등 역사학자로서 바라보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Q.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100주년 기념사업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00년 전 3·1운동은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지 9년이 되던 해인 1919년에 전 국민이 계층과 종파를 초월해 전국적 규모로 벌인 독립운동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 러시아, 연해주, 중국 북간도, 서간도, 미주 세계각지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동포들이 쫓겨난 거족적인 항일독립운동이었지요. 그러니까 1910년 일제의 국권을 강점한 후 쌓였던 일제의 민족차별과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세계만방에 한민족의 독립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사건이에요. 3·1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할 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직속 100주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중 저도 기억·기념분과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

이니까 기념행사도 하지만 3·1운동이 갖는 역사성을 어떻게 현재화 하느냐를 분과별로 의논하고 있어요. 정부나 기관에서는 후원을 하고, 국민과 시민이 중심이 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지요.

Q. 독립선언하며 만세시위를 벌였지만 바로 독립을 성취하진 못했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물론 바로 독립은 안 됐죠. 1945년까지 기다려야했죠. 어쨌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여파로 한 달 뒤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래서 비록 임시정부, 망명정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민국’(民國)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의미를 깊이 생각 안하는데 그 전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였어요. 황제에게 모든 국권과 주권이 주어졌던 봉건사회인 대한제국이 마감되고 주권과 국권이 민에게 주어진 주권재민(主權在民)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3·1운동이라 부르던 것을 ‘3·1혁명’이라고 지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사학계에서 강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Q.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시작됐는데 이 조약은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이런 불평등성을 뒤늦게 알고 그걸 어떻게든지 바꿔 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요. 애국계몽운동, 항일의병운동, 독립협회나 만국공동회의 등 이런 운동들을 계속 했는데, 1919년 이전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운동을 전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말이에요. 3·1운동은 이러한 앞서의 수많은 운동들이 모이고 쌓여서 3·1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말하자면 앞서의 세류(細流)와 같은 여러 물줄기들이 모이고 쌓여 1919년 드디어 '3·1혁명'이라는 큰 강, 곧 대하(大河)를 만들어 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단 말이에요. 앞서의 시대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이었잖아요. 즉 봉건적 왕과 황제가 통치하던 봉건왕조를 무너트리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이죠. '제국'에서 '민국'을 마련한 이 한 가지만으로도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중국 경우도 수천 년 내려오던 봉건왕조를 마감시킨 것이 1911년 신해년 1911년인데 이를 신해혁명(辛亥革命)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의 3·1혁명도 수천 년 내려오던 봉건왕조를 끝내고 민국을 만들었으니 혁명이라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3·1혁명이라는 용어를 바로 쓰는 것은 성급할 수 있지요. 이에 반대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마치 '건국절' 논쟁처럼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선 사학계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전문가들에게 맡겨주는 게 좋을 듯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동학난'이라

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학난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쓰잖아요. 동학혁명이라고 하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혁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로 비생산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설명하실 때마다 한자가 나오면 직접 써주시며 뜻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Q.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친일청산은 얼마나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A. 우리가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다보니 대부분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넘도록 지배를 받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3·1운동 때도 민족대표 33인을 선임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을 민족대표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만세시위 한다고 일본이 식민지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괜한 피해만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발전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결국 종교인들이 민족대표로 나서게 되었는데 그래도 종교인들은 양심적인 세력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세속화됐지만, 당시 종교인들은 세속적 정치인들보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세력이었죠.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예외 없이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되었던 것이지요.

Q. 논란도 참 많았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박정희 대통령을 넣을 것인가를 놓고 토론이 많았지요. 조갑제씨가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말은 있는데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았어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박스기사로 23살 조선의 젊은이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쓴 기사를 찾았지요. 당시 일제로 볼 때는 ‘장한 조선 청년’이었던 거죠. 처음에 그 집안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아들 이름으로 ‘사자(死者)명예훼손’ 출판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했죠. 재판에서 승소했어요. 이밖에도 7~8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승소했어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기술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도 다 알만한 인물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이 있어요. 그 분이 민족의 애국자로 돼 있는데, 1910년 이후 일제에 강제병합

된 이후 엄청나게 친일적 글을 많이 썼어요. 그 전까지 애국지사로 높이 평가받았었는데 저도 처음 큰 충격을 받았었지요.

Q.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맡게 되셨나요?

A. 일제의 오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연히 친일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해방이 되고 새 나라를 건설했으니 과거의 잘못됐던 것을 현 정부가 적폐 정리하듯이 한 번 짚고 가야 된다고 반민특위를 만들어 친일한 사람들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 세력 대부분이 친일경력자들이라 1년도 진행하지 못하고 강제해산 당하고는 지난 60년, 70년 간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어요.

저는 역사학자로 ‘역사는 무엇이나?’ 물으면 ‘역사는 고백(告白)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도 역사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도 고백하여 역사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란 것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하는 역사적 교훈을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차 발표하고, 2009년 11월 효창공원 백범 김구 묘소 앞에서 최종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준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제시대 우리 할아버지가 벼슬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었어요. 가문의 영광으

로 말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친일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진 않잖아요.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빨갱이 소리도 듣고 그랬지만 역사학자로서 저는 할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있어요. 친일인명사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이제 10년 돼서 보완을 좀 하려고 해요.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밀정 노릇을 했던 사람들과 지방에서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당시로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다 못 넣었거든요. 추가 보완할 계획이에요.

Q. 통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과거 1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로 체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당시는 잃었던 국권과 주권을 되찾는 자주독립이었다면 오늘날은 자주평화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동족 형제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지요. 그래서 100년 전에는 한마디로 ‘자주독립’이 화두였다면 지금은 한반도의 ‘자주평화’이죠. 만절필동(萬折必東)이란 고사가 있어요. 중국 황하의 물줄기가 수만리를 흘러 내려오는 동안 때로는 역류도 하고 꺾이고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동쪽 바다로 흘러 내려간다는 뜻

이에요.

지난 70년 동안 남북 간 별의별 일들이 많았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지 않겠지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때로 멈추고 역류도 하지만 결국은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남북문제도 지난 세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나는 결국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최근 들어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똑똑해져야 해요. 우리 국민들과 경실련 회원들이 보다 합리적이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해요.



▲ 윤 고문은 현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역기념분과 위원장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Q.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는데,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내 기억으로는 89년도로 기억해요. 89년도 8월이었나 비가 많이 왔는데 명동에 있는 YWCA 회관에서 처음 모였어요. 그 당시 내가 40대 중반 될 때인데, 그때도 데모가 많았어요. 근데 나는 NL이니 PD니 그런 건 관념적인 거 같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와 닿는 부동산문제, 경제문제 이런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출석하던 교회에 새마당이라는 모임에 참여하며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의식화된 거죠. 그래서 유인물 만들어서 버스에서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그랬지요. 철저하게 문제를 적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고 시위를 해도 합법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 운동이 없었으니까 언론들이 전격적으로 키워주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조직 내 갈등문제가 심각할 때 상임집행위원장을 두 번 했었고, 활동하면서는 금강산도 많이 가고, 실무자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경실련에서 많이 배웠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나의 사고의 틀이라든지 행동반경이 훨씬 넓어졌어요. 마음의 고향같은 곳이에요.

Q.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경실련 회원 및 임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경실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슈파이팅을 잘 하는 거예요. 초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다 하고 밀고 나갔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고 회원도 늘고 그랬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배들한테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데 너무 정치화 됐다고 할까? 여당도 가고 야당도 가고 막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슈파이팅 같은 걸 잘하려면 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근자들도 소명감이랄까 사명감으로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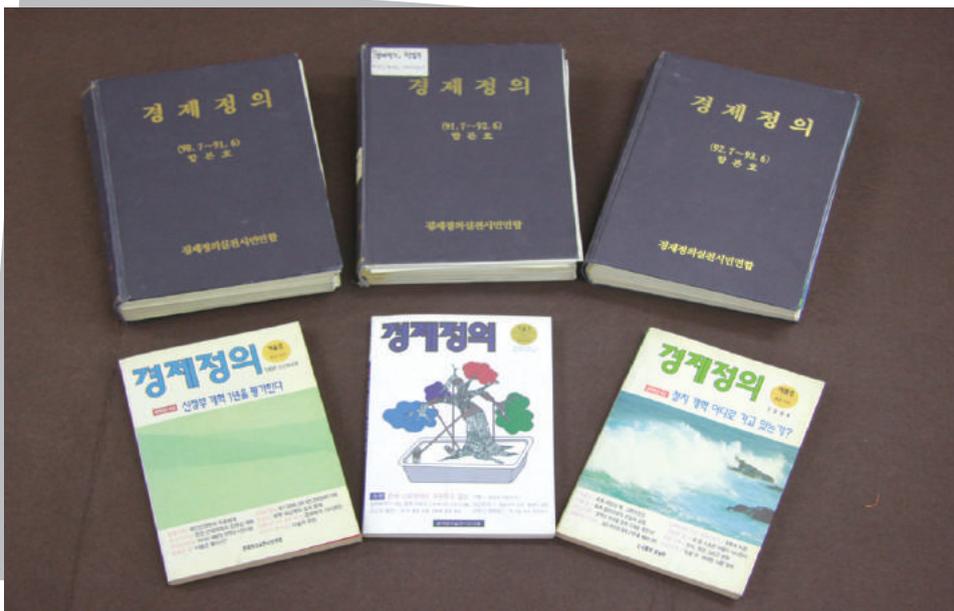
A. 내가 2000년도인가 상집위원장할 때였는데 미국에서 경실련 취재를 나와서 상집위원장이 나를 인터뷰 했어요.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당신 좌우명을 묻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역사학도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당장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훗날 이 문제가 어떻게 평가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하고 행동하려고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훗날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당장에는 박수를 받을지라도 훗날에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 당장보다는 먼 훗날에 어떻게 평가받을 지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발언하려고 해요. 

월간 경실련 30년 역사 (1)

(1990~1994)

1990년 최초의 소식지 경제정의가 창간했습니다.
 경제정의는 1990년 7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발행되고,
 1997년 11월부터는 지금의 월간경실련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아 올해 월간경실련 호수마다 조금씩 나눠서 실을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1990년 창간호부터 1994년까지의 경제정의에서 몇 컷 소개합니다.



1990년 11-12월호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추련을 소개하는 기사도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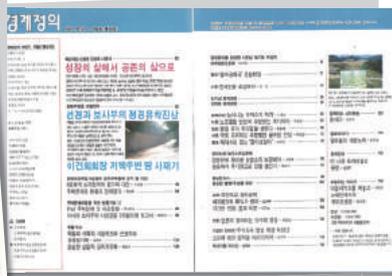
1991년 05-06월호 경실련 선거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



1991년 07-08월호 이게 그 유명한 경실련과 전경련의 공동토론회



1990년 07-08월호 경제정의 창간호 표지



1991년 09-10월호 경제정의 목차 한번 보시지요



1992년 03-04월호 경실련 뉴스는 뭐였을까요



1992년 01-02월호 경제정의 표지



1993년 01-02월호 300여년 전에도 재벌개혁에 열심이었던 경실련



1993년 01-02월호 손석희 JTBC 사장의 글이네요



1993년 03-04월호 한국 유능의 아버지 원경선 선생님에 대한 글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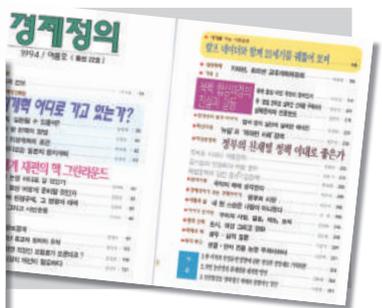
1993년 05-06월호 사진이야기



1994년 겨울호 경제정의 표지



1994년 01-02월호 사진이야기



1994년 여름호 목차

경실련과 함께 걷는 길

[회원가입] (FAX) 02-741-8565 (e-mail) member@ccej.or.kr
 [전화문의] 회원팀 02-766-5627

회원정보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단체 및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원하시면 주민번호 기재)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가입동기

- 추천 (추천인:)
 토론회, 행사 (행사명:)
 인터넷, SNS 기타 ()

회비납부 방식

(CMS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택1)

<input type="checkbox"/> CMS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예금주	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계좌불가)	카드번호		
출금은행	유효기간	월/	년(숫자4자리)
생년월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월납부금액			
개인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법인 (매월)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일시)	<input type="checkbox"/> 60만원	<input type="checkbox"/> 12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회비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자필 필수)

증액 신청서

경실련 회원님,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이름

소속

회비증액 현 회비에서 ()원 증액합니다.

정보갱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연락처

E-mail

주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20

년

월

일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조진만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jmcho7777@hanmail.net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힘은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때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민주국가들 중에서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한국만큼 큰 나라도 드물다. 개인적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정치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불만을 표출할 이유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시민들은 한국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힘들게,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금부터 얘기해보고자 한다.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그 선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효과를 이끄는지 잘 몰라도 된다. 그저 앞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스무고개 문제를 풀듯이 자신의 입장을 예, 아니오의 차원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한가?

첫 번째 질문은 한국정치에 대한 만족 여부이다. “한국정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아니오’ 라고 응답한 시민은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선거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선거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떠한 답변이 돌아올까?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의 결과가 선생님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재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국회의



원이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변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선거와 정당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선거제도는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가에 따라 정당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차지하는지가 달라진다. 앞의 두 질문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면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큼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당한 의석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정치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대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



장을 보일수록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변화로도 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난다. 이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에게 지역구 후보자에 1표, 그리고 정당에 1표를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지역구 차원에서는 유권자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집계하여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전체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지역구 차원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253명(84.3%)이고, 정당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15.7%)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이어가 보자. 네 번째 질문은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에 만족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계속 1등 후보만 지

지한 유권자들은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1등 후보는 빈번하게 뒤바뀐다. 뿐만 아니라 1등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등만 뽑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유권자들은 많이 존재할 것이다. 특히 1등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적은 군소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그 불만이 더욱 클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를 하면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표(死票)’를 던지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할 경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거대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1등만 뽑는 선거에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선의 거대정당에게 투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거대정당 중심의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로 뽑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앞의 네 번째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권자라면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떠한가?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지역구에서 뽑지 않고, 전국 차원이든 권역별로든 정당투표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

람직한가?” 앞의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적인 선거제도로 변경을 하면 된다. 비례적인 선거제도의 종류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든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역구 차원에서 1등만 뽑는 선거가 갖는 지역대표성의 장점이다. 전국을 지역구로 나누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경우 각 지역구마다 유권자는 확실한 대표자를 갖게 된다. 그런데 전국적인 수준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을 한 번에 비례적인 방식으로 뽑는다면, 아니면 100명의 국회의원을 각각 50명씩 두 지역으로 나누어 비례적인 방식으로 뽑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유권자가 개인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민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느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부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소 모호해진다. 유권자 수가 적거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거주한다면 더욱욱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제도가 문제점도 많지만 이와 같이 지역대표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갖는다.

여섯 번째 질문은 다섯 번째 질문에서 제기한 문제를 종합한 것으로 구성된다.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의 지역대표성의 장점과 유권**



자들의 선호가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의 장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존재한다면 채택할 것인가?” 일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여섯 번째의 질문에 동의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을 행사한다.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현행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가 각각 분리적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의 결과가 연계적으로 고려되면서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적인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되어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정당투표의 결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이 결정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정당투표의 의석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을 배분받게 됨으로써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례한 전체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놓고 보면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 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곱 번째 질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동의하겠는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전체 의석이 정당투표의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초과 의석이나 조정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초과 의석은 정당투표의 득표율보다 상회하는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들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 득표율상 전체 10석의 의석을 가져가야 하는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12명 중 2명을 낙선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2명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다른 정당들도 그 초과의석 분을 고려하여 전체 의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조정의석이다. 그래서 당초 정해져 있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된다.

한국의 경우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와 국회

의원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이 질문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나쁜 점이 아니다. 한국은 다른 민주국가들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일 인당 대표해야 하는 유권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국가이다. 경제 수준이나 공무원 규모 등과 관련한 다른 지표들을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지금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자 본말전도(本末顛倒)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의 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의석의 절반씩을 할당하지만 한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이 15.7%에 불과하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과 비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과 순위 결정 등에 있어서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가를 보여줄지 등은 여전히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 도모라는 큰 틀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영역이지만 시민과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

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의 영역으로 남겨 주고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선거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된다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거대정당들에 대한 시민들이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형성될 것이다. 다당제 하에서는 부득이하게 정당들 간의 연합이나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당제가 대통령제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놓고 보면 양당제든 다당제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가 대등하지도 않고 협력적이지도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당제-협치”라는 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다면 대통령제와의 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말로만의 논의 이상의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선거제도의 변경이 개헌의 절차보다 쉽지만 그 효과는 개헌에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개혁의 첫 단추가 선거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hwseo@ccej.or.kr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이 1월 내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를 연장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정개혁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대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사실,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거대 정당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소수 정당이나, 총선을 대비한 셈법 골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일 때조차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위해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거대정당의 과대 대표로 인해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

입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옳은 방법이다.

그렇기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각 정당의 이권 나누기 방식으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권에만 맡겨 두면, 결국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조차 거대 정당의 입김이 과대 대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 개편은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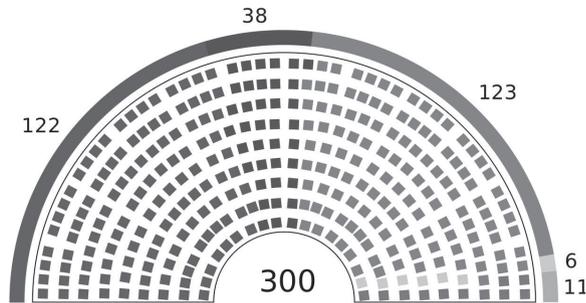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거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 장치로 작동한지 오래이다. 거대 정당은 과대 대표되는 한편, 소수 정당은 과소 대표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난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5%와 25.5%의 정당지지율을 가지고 122석(40.67%)과 123석(41.0%)의 의석(총

〈표 1〉 제17~제20대 총선의 득표율과 의석 수

국회의원선거	1등 정당의 득표율	1등 정당의 의석수(비율)	2등 정당의 득표율	2등 정당의 의석수(비율)
제17대 (2004년)	38.3% (열린우리당)	152석	35.8% (한나라당)	121석
제18대 (2008년)	37.5% (한나라당)	153석	25.2% (통합민주당)	81석
제19대 (2012년)	42.8% (새누리당)	152석	36.45% (민주통합당)	127석
제20대 (2016년)	33.5% (새누리당)	122석	25.54% (더불어민주당)	123석

〈표 2〉 2016년 제20대 총선의 득표율과 의석수

정당명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33.5	122	40.7
더불어민주당	25.5	123	41.0
국민의당	26.7	38	12.7
정의당	7.2	6	2



81.7%)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소수 정당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와 맞물려져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바로 지역 패권적 정당체제의 고착화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은 영남에서의 득권을 활용해, 중도개혁 정당은 호남에서의

득권을 활용해 승자독식 구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승자독식 정당체제, 지역패권 정당체제 등)은 현재의 지역구 선거제도(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



다득표자 1인만을 당선시키기 유한제도다.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에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대 정당의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지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옳은 방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문제,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당정치까지 활성화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 7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① 의석배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지지율을 의석으로 그대로 반영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정당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던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¹⁾

②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얼마로 조정할 것인가?

현행 5,38(253석)대 1(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정해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③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지역구에 240석, 비례대표에 120석을 할당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④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지역대표성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물 중심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더 큰 제도적 정합성을 가진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도

1) 현재 야3당은(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만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 “간접 선거다”라는 구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꾀수를 부리고 있다.

시는 소선거구, 농촌은 중선거구)는 정치권의 편익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행대로 1선거구제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⑤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기존의 정당명부식 선출 방식을 유지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선거일 전 60일까지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도록 한다. 다만 유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이 비례대표 후보를 모른다는 결점이 있으므로 상향식 공천제도를 법제화하

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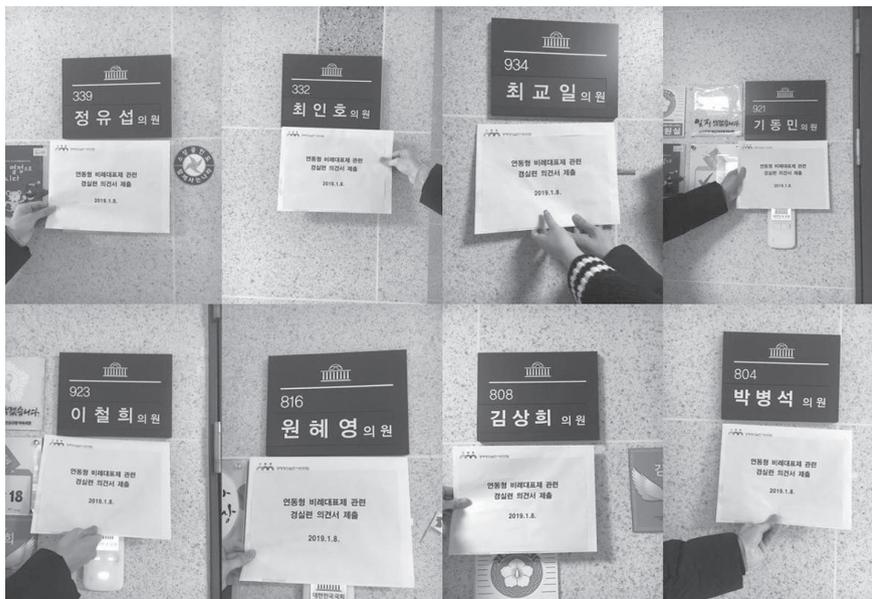
⑥ 그렇다면, 비례대표 명부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시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반드시 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하여 밀실 공천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석패율제 도입해야 하는가?

현재 여야5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 적극 검토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와

<그림>경실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20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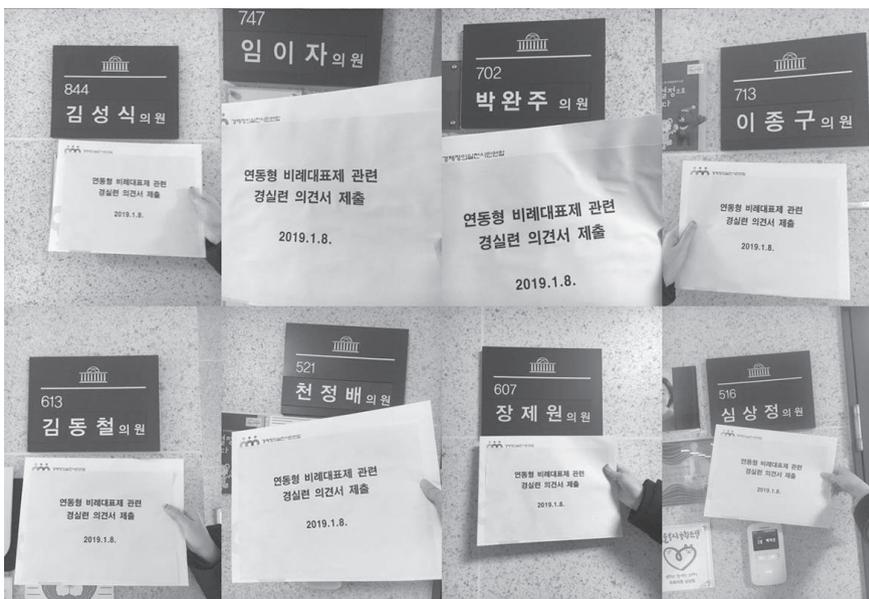
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은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그 효능이 크지 않으므로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시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정치권 내에서의 땅파먹기 식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신년 K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50%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고, 20%는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국민 80%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에 반대한다고 한다.

사실 국민들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불신·국회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국민적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정당정치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의 빈번한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먼저,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나서고, “거대 정당의 승자독식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외쳐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오래된 정치불신·국회불신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그림〉경실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2019.1.8.)



[인터뷰]

거대양당의 의원정수 확대 반대는 지독한 국회불신 이용한 기득권 유지 꼼수!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dongi78@ccej.or.kr

서희원 정치사법팀 간사 hwseo@ccej.or.kr



지난 10월 24일 닳을 올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맡은 국회직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는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어디를 가도 기승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현재 상황과 계획을 들어보고, 국회개혁과 개헌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심상정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국회 의원 선출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꼭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성격이 강합니다. 거대양당만 살아남고, 당선된 1등을 찍지 않은 표가 모두 사표가 됩니다. 한번 선거를 하면 50%가 넘는 표가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지죠. 모든 시민의 1인 1표의 가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표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을 닮은 ‘민심 그대로’ 국회가 실현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이익을 보았던 거대양당의 독주는 끝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되었던 다양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두 당을 설득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현재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로 기득권을 누

린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상당 부분 왜곡해 왔고, 이런 왜곡이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60%에 이릅니다. 국회 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지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정개특위는 18명 중 14명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각 당 소속 의원들이 각 당 내의 당론이나 당 지도부 의견, 의원들의 중론과 무관하게 정개특위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당 논의와 정개특위 논의를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Q.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가요?

A.“지독한 정치 불신 속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 정수를 증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잘한 것도 없고 매일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커진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 당사자가 거대양당 아니겠습니까? 그

러면 ‘이렇게 국회를 개혁하고 이렇게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진솔한 개혁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으면 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현재처럼 300명 범위 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만나 보면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국민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건 국회가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사람 수만 늘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Q.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권 내려놓기가 가능할까요?

A.“국민이 이겨야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해주시면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이 희소가치가 있으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됩니다. 수가 적으니 로비하기도 쉽습니다. 반대로 특권을 확 낮추고 진입장벽을 낮추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 힘도 강화됩니다. 머슴의 수가 늘어야 희소가치

가 떨어지고 진짜 일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동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판기념회도 없어졌고,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도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한 번 하면 평생 연금 나오는 헌정회 연금도 2008년에 벌써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십 년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선한다고 약속해도 그대로였던 특수활동비가 전면 폐지되기도 했고요.

나까지 개혁은 성공하고, 나 빼고 개혁은 실패한다는 말이 있죠. 셀프개혁은 어느 기관이나 어렵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국회의원들도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기 싫은 일부가 국민의 뜻을 방패막이 삼아 현상유지하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Q. 경실련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독립 기구에서 결정)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경실련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셀프개혁’은 어렵습니다. 국회 개혁에는 국민이 힘을 모아 밀어붙여주셔야 국회도 무거운 엉덩이를 뺄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세비 동결과 세비 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누누이 말해왔죠. 선거제도 개혁은 강력한 국회



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투명한 국회, 일 잘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정하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입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도 특활비 폐지법안을 내면서 시민참여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징계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징계 못하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윤리심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을 제도적 대안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국회의원이 하는 셀프심사가 아니라 시민사회에게 맡기는 개혁이 필요 합니다.

모두 영국, 미국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국회에 대한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개혁의 핵심일 것입니다. 곧 정의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개혁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Q. 지난 12월 여야 5당 합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가장 쟁점은 무엇인가요?

A.“정치는 명분이라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는 현실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둘 다 정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대의명분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각 정당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청년계,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문위에서 지난 9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투표 참여 연령 18세 하향 등과 같은 논의의 결과물인 의견서를 전달하시면서 개혁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중요하기에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직선제 이후에 30년 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니깐요.”

Q. 원포인트 개헌(권력구조 문제)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보이는데 혹시 헌법 개정 절차를 쉽게 연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헌법개정 절차의 연성화는 제가 이번 20대 국회 전반기에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이전에 국민의 개헌 의지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헌법이 보장하도

록 한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정개특위는 골든타임을 넘어 라스트타임에 도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Q. 경실련에서 지난 8일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잘 받아보셨는지요?

A. “네, 잘 받아보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 도입을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 개특위 안팎에서 시민사회와 오피니언 그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제시한 의견들 모두 정개특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Q.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제일 힘드신 점은 무엇인지요?

A.“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한 구심력보다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더 큰 점이 힘듭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당마다 셈이 다르니 중지를 모으기가 참 어렵네요. 야3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 정치권을 지배하는 것은 거대양당이니까요. 하루하루 날짜가 가는 것이 야속하고,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더 노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87년 직선제 이후에 30년 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기 까요. 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생각은 다를지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지지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마다 힘을 냅니다.”

Q. 끝으로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입니다. 경실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황금돼지해에 다들 돈을 말하고 풍요를 기원하지만,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경실련에서 올해도 많은 노력 해주시고, 또 그만큼 값진 성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정개특위와 정의당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심 의원의 말처럼 라스트타임에 도달했습니다.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락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쇠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



2019년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 문제를 알리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주축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없다. 오히려 재

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시켰고, 규제완화와 함께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해 실효성 없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셀프개혁’까지 주문하고, 재벌들이 일부 순환출자 고리

를 해소하자, 자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끌어내고, 포용국가로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이어 발표한 세부정책 내용을 보면, 공정경제 정책은 역시 보이지 않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정부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언론, 전문가 등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을 개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재벌개혁 없이는 높은 진입장벽, 기술탈취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먼 이야기일 뿐이고, 높은 재벌 의존도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 재벌 3세와 4세 후계경영인들은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통해 부와 경영권을 세습해 나가며, 소수지분으로 황제적 권위까지 누려 나갈 것이다.

설립 30주년을 맞은 경실련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금년에는 총력을 기울여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여론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도록 만

들고자 한다. 크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재벌의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국민 개혁 여론 조성(재벌 알리오)

경실련의 재벌개혁 운동이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국민여론 형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지 못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 관련 실태를 알리는 데이터 기반 운동을 했을 경우,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의 공약이 될 만큼,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또 다시 재벌들의 문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이터 기반의 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자산, 매출, 계열사, 이익, 불공정 행위 등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언론과 국민들



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벌개혁 아카데미’와 ‘유튜브 토크 영상’의 제작과 홍보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즉 재벌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개혁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여,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올해는 내년 있을 총선 분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여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현 20대 국회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 활동과 정부의 재벌정책을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알림으로써 총선에서 재벌개혁 의제가 관철되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평가, 국회의 법안발의 조사 및 평가,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불러오는 특혜제거

우리 경제의 곳곳을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특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조세, 금융, 부동산, 공공건설, 공공요금, 농업, 정보통신 등 많은 분야에서 특혜가 존재한다. 조세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의 소득세율 및 양도세에서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부동산과 공공건설, 금융 분야 등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만큼, 우리 경제

는 재벌에게 기울어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야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특혜를 드러내어 여론화시킴으로써 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재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의 만남은 과거의 정경유착, 친재벌 정책으로 선화했던 정부를 떠오르게 하여, 우려감이 크다. 경제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다. 고착화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발전은 담보되기 어렵다. 2019년 경실련은 어렵지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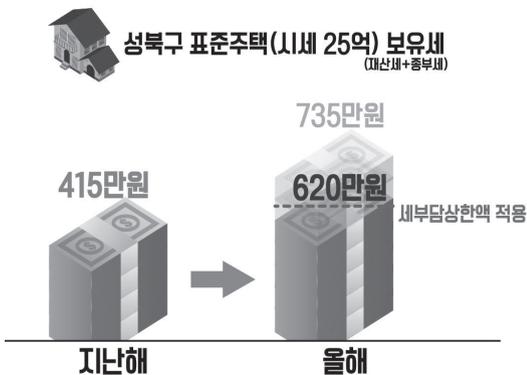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bansug5@ccej.or.kr

연초부터 공시지가 문제가 뜨겁다. 주택 가격과 땅값의 기준점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자, 일부 언론에서 또 다시 ‘세금폭탄론’을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도 세금폭탄 운운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저지에 순가락을 얹었다.

논리의 근거로 서울 소재 고가단독주택을 내세우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의 A다가구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13억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3억 6,000만 원으로 10억 원 올랐다고 한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전년도에 비해 211만 원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14억 원일 뿐이지 실제 가격은 최소 20억 원 이상이다. 20억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18만 원 더 내는 것이 세금 폭탄이라니...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대부분 주택은 재벌 회장과 부동산부자 소유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B주택이다. B주택의 소유자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다. 작년 공시가격은 169억 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 원으로 60% 상승했다. 보유세는 2억 1,400만 원에서 3억 2,100만원으로 오른다. 신세계그룹 이 회장이 소유한 B주택의 시세는 340억 원이다. 신세계슈퍼도 아니고 신세계마트도

아닌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340억 원짜리 주택의 보유세가 1억여 원 오른 게 세금 폭탄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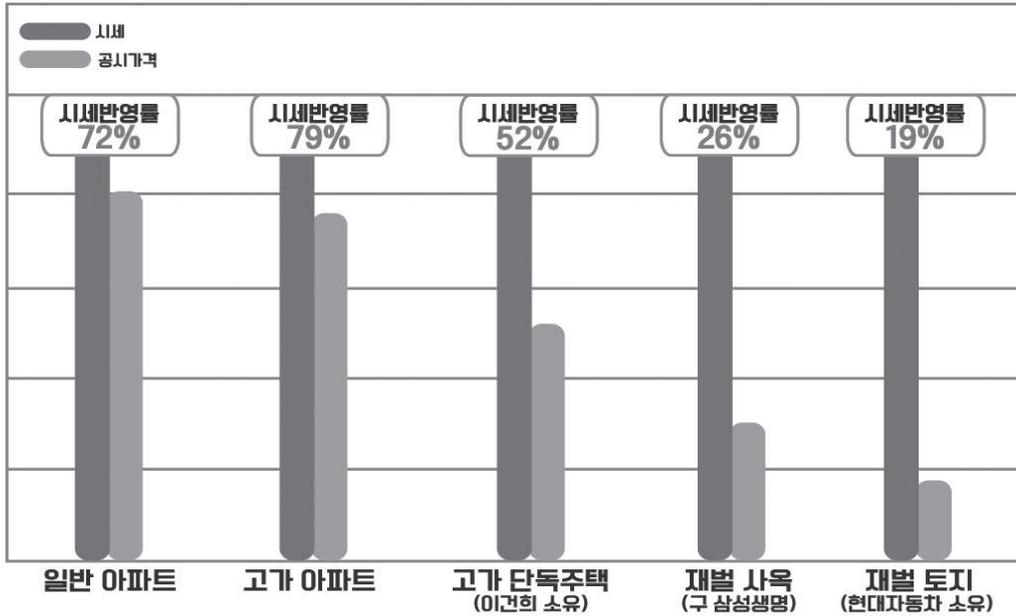
일반 서민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상승률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C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1억 1,000만 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상승하지 않았고, 보유세 역시 18만 원으로 그대로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 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3억 1,000만 원이었다. 올해는 2억 9,0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유세도 6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줄었다. 이렇듯, 일부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예년 수준보다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왜 공시지가 현실화, 다시 말해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여러 차례 실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형별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은 70~80%, 고가단독주택은 50%, 고가 빌딩 및 토지는 20~30%의 시세반영률을 보인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17평 일반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억 8,000만 원이다. 시세는 2억 5,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2%다. 서울 강남에 있는 24평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6억 원이고 시세는 33억 원이다. 시세반영률이 79%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단독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61억 원, 시세는 500억 원이다. 시세반영률이 52%다. 재벌 빌딩과 그 부

공시가격에 따른 단독주택 보유세 변화

소재지	공시가격(억원)		상승률(%)	시세(억원)	보유세(만원)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실납부액
서울 용산구 한남동	169	270	60%	340	21,400	39,500	32,1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9	58	49%	80	2,100	3,700	3,150
서울 성북구 성북동	12	17	42%	25	415	734	623
서울 광진구 중곡동	2.6	2.8	8%	3.5	47	52	52
경북 포항시 남구	1.1	1.1	0%	1.5	18	18	18
전남 목포시 산정동	3.1	2.9	0%	3.3	60	55	55

불평등한 시세반영률(2018년 기준)



지는 시세반영률이 더 낮다. 2014년 현대차가 10조 5,000억 원에 인수한 강남구 소재의 한 전부지는 공시가격이 2조 7,000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6%에 불과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고가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70에 대한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30에 대한 세금을 낸다. 문제는 돈 없는 일반 서민이 100의 70을 내고 돈 많은 재벌이 100의 30을 낸다는 점이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

다. 부동산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되는 현상이다.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이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면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한다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 공수처가 답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wisehero@hanmail.net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44호)을 아시나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그 이름을 하나씩 나지막이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모든 검사들은 검사로 임관할 때 정의실현과 인권보호를 다짐하는 검사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가슴에 고이 품고 검사생활을 시작

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합니다. 한 검사는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과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범집행을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사죄하고 공익의 대변자의 역할에 충실한 그 검사에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임관하면서 선서한 대로 초심을 잘 지켜서 정의실현과 인권수호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도



입 논의는 전혀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와 진실에 의거해 검찰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고, 표적 수사, 정치정보복수사, 짜맞추기 수사, 편파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일삼아 왔습니다. 실제로 2007년 12월 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전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한 검찰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후에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진실도 바뀌는 것일까요. 스폰서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전관예우의 결정판 정운호 게이트 등 검찰 관련 부패 사례를 찾아보자면 끝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검사선서를 한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 조직이 왜 정권의 해바라기가 되고, 검찰 주변에서 부패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 액턴 경(John Dalberg-Acton)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정권에 따라 다른 수사 결과를 내어 놓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절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



의 등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검찰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비리, 표적 수사, 정치보복수사, 짜 맞추기 수사, 편파 수사, 부실 수사, 직권남용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기소권이 없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2004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검 검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내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투명한 사회를, 투명한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굼은 상처는 상처가 없다고 속이거나 밴드나 붙여놓아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름을 짜내야만 상처가 낫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서지현 검사가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공로로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올해의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수상소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자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 검찰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굼은 상처를 외면하고, 그저 밴드 정도 붙이는 미봉책으로 검찰의 문제점을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거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를 상상해 보세요. 공룡세계의 절대강자이지만, 고름을 짜낼 두 팔이 이미 퇴화해 버렸습니다. 자신에 등에 생긴 종창의 고름을 스스로 짜낼 수도 그 주변의 살들을 도려낼 수도 없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고육계(苦肉計)'가 검찰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검찰 안에 있는 지혜로운 검사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대해지고, 수많은 관계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검찰은 스스로 자신의 살을 도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선서>의 '용기 있는 검찰', '따뜻한 검찰', '공평한 검찰', '바른 검찰'로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수처가 검찰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면서 '옥상옥이다' 또는 '검찰 위의 검찰이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의 새로운 경쟁자입니다. '비대한 공룡' 검찰에 대응하는 '날쌔 표범' 공수처가 새롭게 등장하면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이 축소·은폐하고자 부실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검사, 판사, 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 편향성, 부패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그 설계도가 이미 발의된 6개의 법안 속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법무부안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수사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수사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과의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의 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와정을 통해 적절한 법안 내용을 선별해서 모듈별로 선택 또는 조정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관전 포인트는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자는 국회의원들, 공수처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국회의원들,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무력화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형광펜, 빨간펜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당, <보수의 정신>에서 답 찾아야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에는 보수의 10대 원칙이 나옵니다. 그 아홉 번째 원칙은 “보수주의자는 권력을 신

중하게 자제해야 할 필요를 인지한다.”, “보수주의자는 권력을 제한하고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헌법적 제약, 정치적 견제와 균형, 법률의 적절한 강제, 예로부터 의지와 욕구를 억제와 미묘한 그물망 등을 자유와 질서의 도구로 승인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보수 재건의 해답이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에 숨어있습니다. 보수의 궤멸적 타격 이후 보수 재건의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 출발점이 고위공직자 부패와의 단절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그 입장을 완전히 변경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앞장선다면 자유한국당에 싸늘히 식어있던 민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부자(附子), 비상(砒霜), 천남성(天南星) 등은 사약의 주재료였습니다. 이 약재들은 강한 독성을 지녔지만 중한 병에는 소량으로 쓰면 약이 되었습니다.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독약을 받는 것 같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이를 받아들이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검찰,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이 공수처 도입에 있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종도불종군(從道不從君)의 자세로 관계(關係)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큰 용기를 내어 공수처 도입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로운 검찰, 깨끗한 보수가 바로 설 때만이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양문수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syang@kyungnam.ac.kr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작년 4월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5월에는 당일치기로 두 번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어 9월에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한 해에 한 번 열리기도 힘든 남북정상회담이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열렸다.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작년 6월에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 초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7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은 그 속도가 너무도 빠른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및 한반도 관련 메가톤급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한반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로 대표되는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평화 또는 한반도 평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변화는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공통으로 추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목표는 존재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



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는 북한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북미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한반도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키워드는 평화 또는 평화체제이다.

요즘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공개적인 장에서 한반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온다. 이 또한 새로운 흐름이다. 어쩌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태를 상징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은 앞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꽤 오랜 기간 남북한의 평화공존 기간을 거쳐야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크게 진전된다면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이 완화되고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가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되면 통일의 여건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통일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게임임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남한은 분명 통일을 추구하겠지만 북한은 과연 그러할까. 특히 북한

지도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권력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남한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남북연합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은 이와는 정반대로 Two Kore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남북한 당국자들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공개적·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아졌다. 하지만 북한정부의 속내는 Two Korea이다. 남한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따름이다.

설령 상당한 시간이 흘러 통일을 달성한다고 해도 통일은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세계화 시대의 통일, 즉 다양한 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체들과 공존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그토록 갈구하는 체제안전보장을 실현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대폭 개방된 상태, 국제화의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통일보다는 평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 세계관 또는 철학에서 키워드는 통일이라기보다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통



일이 평화의 선결요건이라고 보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통일의 선결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평화의 구축 및 정착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통일에 관해서는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한다. ‘법적인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한다. 정치적 통일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통일의 본질은 연방제, 연합제, 체제통일 등 어떤 제도적 상태라기보다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이 확대·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파악한다.

이렇듯 남북 간에도 평화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면, 이는 남북경협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여건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상응하는 남북경협, 나아가 남북한 경제관계 체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대두된다. 둘째, 향후 남북경협은 어떤 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는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속화·공고화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대두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상태이자 과정이다. 장기적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남북한과 함께 주변국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사안이다. 북한이 갈구하는 체제안전보장은 북한 영토에 무수한 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체들이 거주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남북한 경제관계 체제도 그러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남북경제공동체 논의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즉 대북제재가 거의 다 해제된다면 미, 중, 일, EU 등 다양한 해외의 경제 주체들의 북한 진출 러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 사업을 남한 혼자 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양면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외의 경제주체들, 공공·민간 자금들과 북한에서 동거·공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결국 언제, 어느 분야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 또한 경쟁할 것인가 하는 북

남한 방정식을 푸는 문제, 전략을 짜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남북경협에서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주변국과 비교한 우리의 분야별 경쟁력 진단 및 제고와도 관계가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한편, 이제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 때로는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의 북한진출에 대해 한국이 거부·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자본의 북한 진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북한 비핵화시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사회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의 구체적 분야까지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런 분야에 미국자본이 북한 진출을 타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자본의 북한 진출에 난관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다. 그런 요인들은 상수로 인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 용균이에게

김중현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sungkimj@naver.com

용균아!
그 곳은 따뜻하겠지? 그리고 햇빛 들지 않고,
탄가루가 날리는 그런 곳도 아니겠지?
이곳은 남부지방이지만 한겨울로 치닫고 있어
많이 춥구나. 그리고 연일 미세먼지 발령주의보
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나는 몇 해 전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3개월
가량 병원 신세를 진 전력이 있는 올해 50살이
된, 너보다 2배쯤 더 세상을 산 그러니까 삼촌
뻘라고 할까?

산업재해 기간 중에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도 나오고, 산재사고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 종류의 안내
문과 때때로 근로복지공단 마크가 크게 찍힌 수
건이며, 탁상용 달력이며, 여행용 세면도구 세
트도 선물로 받으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산업안전교육도 받고, 현장에서 안전화, 안전
모도 지급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막연한 생각. 그러나 지
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멍청하였다’라는 생각
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너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
서 처음에는 뉴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었다. 나의 유년기 시절. 나를 아는 사람
들은 나를 “김용근”으로 불렀기에.

중학교 사회시간에 ‘이타이타이병’에 대해서
는 배웠지만, 그리고 성인이 된 후 학원 강사를
하면서 초등학교생들에게 ‘이타이타이병’이 카
드뎀이라는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
이고 일본어 ‘이타이타이’를 번역하면 ‘너무
너무’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쳤지만, 1988년 같은 중금속인 수는 중독
으로 사망한 우리나라 노동자 문송면에 대하여
는 알지 못했구나.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전
에 중금속 중독(오염)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



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한참 지나서야 중금속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할 정도였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노동자 문상면의 ‘죽임’(죽음이 아닌 국가적 살인에 가까운)이 시발점이 되어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1988년 7월 우리는 또 한 번 ‘이황화탄소’라는 어렵디어려운 기체를 접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죽이던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맹독성을 가진 기체를 매일 접하며 인건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원진레이온 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슬프구나.

정부와 기업들은 안전화, 안전모 하나 던져주고는 자신들의 산업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우쭐대고, ‘협력업체’라는 미명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케 하면서 유해시설 점검시 “2인 1조 근무”, “사고 발생시 동행자가 조속하게 신고”, “산소 측정기 휴무하고 선(先) 산소 측정 후(後) 유해시설 진입, 그렇지 못할 시 진입금지(작업 중지권)” 등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합법화하고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현실.

더욱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작업 중지권을 ‘작업 중지 명령 땀 대기업들 수천억 손실 우려’라는 제목의 보수 언론의 보도 행

태를 보면서... 분노가 치미는구나.

전태일 열사에 이어,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그리고 수십 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개정, 재개정에 이른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에 김용균 노동자로 인해 또 한 번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륜(人倫)과 도덕(道德) 위에 경제논리가 군림하던 현상이 조금 씩이라도 견혀지고 있다는 현실이 반갑고, 한편으로 너무 더디어 안타깝기만 하구나.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기업, 국회, 정부와 싸우겠다는 용균이의 어머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햇빛과 같은 자식을 허무하게 잃고 산산이 부서진 용균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용균이보다 험악한 곳에서 일하는 아들, 딸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욱 노력할게.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보전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발표나 저명한 학자의 논문이 나오도록 않도록...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고, 다치지 않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싶다”는 노동자 아니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기자: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재 피해자: 아니오

기자: 이황화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그 물질에 대해 위험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산재 피해자: 아니오. 일 년에 한 번 불조심 교육을 받긴 했지만, 입사 20년 동안 한 번도 위험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가(원진레이온 사건을 조사하던 한겨레 신문 의학전문기자의 피해자와의 인터뷰) 역사의 화석이 되어 현재와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를 바라며, 햇빛 따뜻한 그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라네.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운 2019년 1월 어느 날... ☹☹☹



▲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시민분향소(사진제공: 유재홍 시민)

[동지내몰림 시리즈]

“재개발 무조건 중지하고,
여기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운 재개발 세입자)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dong178@ccej.or.kr



▲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세운재개발 3구역

딱 10년 전 용산참사 현장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인터뷰를 위해 청계천 관수교 앞 농성장을 찾아갔을 때 P사장이 보여주신 세운재개발 3구역 현장을 보는 순간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용산참사 10주기입니다. 재개발 문제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도 또 다시 대책 없이 재개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으로 청계천에서 60년 넘게 장사하던 상인들이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청계천에서 25년간 장사하다 쫓겨나신 P사장과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강문원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Q.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P사장: 3구역을 기준으로 2006년도에 시행사가 집주인들과 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에 관광객들 대상으로 호텔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중국인들 한국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작년 3월 투자자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상인들 나가라고 압박을 시작한 거죠.

시행사가 2006년 계약금 주고, 작년 4월에 중도금 60% 주고, 나머지 30%는 세입자 다 내보내면 주겠다고 나온거예요. 재개발지역에서 영업보상비를 4개월치 주게 돼 있어요. 원래는 2개월이었는데 용산참사 나고 4개월로 뒀지요.

시행사에서는 ‘땅값 많이 쳐줄 테니까 지주들에게 세입자는 알아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시행사가 재촉하다가 ‘당신들이 못 하겠으면 우리가 하겠다’하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5억 5천까지 소송을 걸어요. 마지막에는 월세를 100% 올리더라고요. 심지어는 10월달에 월세를 올리면서 지나간 7, 8, 9월까지도 100% 올려 달라고 해요. 엄청난 압박과 심리적 부담이죠. 그래서 싸우다 안 되니까 보상 받고 다 쫓겨난 거죠.

Q. 대체부지는 있나요? 이주하신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나요?

P사장: 대체부지는 없고, 일부는 아예 폐업하신 분들이 있고, 일부는 저처럼 청계천을 떠난 사람, 나머지 분들은 작년 4월 2구역 빈 가게들로 들어갔어요. 2구역은 바로 앞에 종묘 공원이 있어서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고도가 16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2구역들이 원래 경기가 어렵다보니 빈 가게가 많았는데 2구역으로 서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권리금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저도 25년 여기서 기계판 매업으로 장사했는데, 당분간 다른 가게 창고에 있다가 2월 중순쯤 경기도로 떠날거예요.

Q. 세입자 대책이나 이주비, 보상 등은 어떻게 된 건가요?

P사장: 영업보상비 4개월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원래 3구역 전체 개발을 하면 3-2



▲ 현재 소송이 3억 걸려있어서 얼굴과 실명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신 P사장

구역에 대체건물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게 시
행사의 세입자 대책안이었어요. 구청에서 인
허가를 받으려면 세입자 대책안을 세워야 인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도로 15m를 기부
체납하고 그 안에 대체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
지 임시 컨테이너 설치해서 장사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시행사에서 품수를 부려 3-1, 4, 5
만 부분 개발을 먼저하면서 전체 개발이 아
니라 부분 개발이라 대체건물 지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부분 개발은 대체부지
를 안 해줘도 된대요. 전체 개발 할 거면서 단
지 시간차인데 전체 개발이 아니라 부분 개발
이라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분양권도
해준다고 했는데, 컨테이너도 그렇고 다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Q.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면 지금 물건 4/5는 지방에서는 못 팔아요.

청계천 영업 생태계는 도매, 소매 다 톱니바
퀴 굴러가듯 박자가 맞춰져 있어요. 협업이
잘 되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 청계천의 특성
인데 극히 일부라도 더 이상 빠져나간다면 청
계천은 유지하기 힘들어요.

**Q. 용산참사 10주기인데, 재개발 세입자
대책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
지요?**

P사장: 변한 거는 보상금을 조금 더 준다는
거 밖에는 변한 게 없어요. 엄청난 대규모 단
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5년이 걸
리든 10년이 걸리든 여기 있는 세입자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해야 재개발의 의미가



▲ 청계천 관수교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강문원 위원장

있는 거죠. 세입자도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런데 2006년부터 그런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남대문에 불 지른 사람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땅 강제로 수용당하니까 억울해서 그걸 알리려고 불을 지른 거예요. 용산사태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제2의 용산 참사같은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시, 구청,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서로 잘 해결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Q. 지금 세운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강문원: 리모델링이나 수정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재생산이지만 다 때려 부수어 건물 새로 짓는 건 재생사업이 아니에요. 재개발이예요. 지저분한 것은 고쳐가며 쓰는 거죠. 사람이 지저분하다고 죽여 버립니까? 여기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만날 민원 들어와선 '여기 더럽네, 저기 더럽네' 하면 결국 청계천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파트 지으면 절대 안돼요. 상업지역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청계천은 옆 가게 있는 사람이 상담해서 물건 팔고,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공구가 무너지면 보석상, 시계, 과학기자재, 인쇄, 정밀가공 전부 다 무너지니까. 다른 데 가서 장사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대다수는 나가서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세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젊은 청년창업자들이 입주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가 배후단지가 너무 잘 돼있기 때문이에요. 최첨단 3D 프린터 생산하는 사장님이 스타트업 하기에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샘플 생산할 때 1~2천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오면 2~3백만 원이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창업을 한 건데 양 옆의 인프라를 다 때려 부수니까 여기 온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지금 하나둘씩 저희를 찾아오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거죠.

Q. 비대위 주장은 무엇입니까?

강문원: 무조건 보존! 입니다.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이에요. 외국에서 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장인들이 많아요. 이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딱 떼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도태돼요. 죽어야 돼요. 적응을 못해요. 다른 데 가서는 일을 못해요. 지지분하다, 오래 됐다, 눈에 보기 싫다, 박정희 시대 때도 이렇게 안했어요.

P사장: ‘재개발 무조건 중지!’ 입니다. 재개발하고 싶으면 여기서 터전을 일궈온 세입자들한테 협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협의를 해야죠. 협의 없이 무조건 땅 샀다고 나가라고 구청, 시청에서 허가해주고 그게 무슨 재생이고, 상생입니까.

서울시 찾아가면 인허가는 중구청에 있다고 하고, 중구청 찾아가면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서로 미뤄요.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네요.

Q. 경실련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P사장: 여기는 비록 장사하고 물건 제조하시는 분들이 다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전부다 여기서 물건 납품받고 구매해가서 그렇게 큰 겁니다. 이 청계천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곳이 남아 있어야만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원: 지지분하다고 없어질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출처: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심정을 여쭙보는 질문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말하면서도 참 죄송했습니다. 저 같아도 몰라서 묻느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무섭고 두렵다는 사장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돈 벌어서 국가에 세금 내고 정당하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애들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막막한 이 분들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까 싶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세입자를 대책도 없이 사지로 내모는

비극을 중단하고 누구나 상생할 수 있게 재개발·재건축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길 바랍니다. 〇〇〇



[좋은사회적기업상 인터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리소리 강원두레)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dong178@ccej.or.kr



▲ 지난 12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왼쪽이 엄기중 대표)

경실련은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좋은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올해 27회를 맞이했고, 좋은사회적기업상은 4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모두 5개의 기업이 수상을 했고, 그 중에 특별히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화예술 전문 사회적기업인 (주)노리소리 강원두레의 엄기종 대표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오늘날 새로운 생활예술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고자 고성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리소리강원두레' 이름은 조선시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민속놀이인 두레놀이와 두레소리를 합성한 후 재구성하여 만든 것입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소개와 현재하고 있는 활동과 주요활동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 고성 지역의 청장년 예술가 및 예술 강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운영, 고성농악 및 고성아리랑 등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및 전승 활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 내 문화제 및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 대행 사업 등을 해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고성역사문화연구소, 농가주부모임 밴드 등을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상주단체로 설립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산과 역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합창단, 장애인합창단 및 고성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매개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및 기관 단체와 MOU 체결을 통하여 무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특별히 사회적기업을 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생생활을 하던 중 실패하고 돌아와 방황하다 경기도 일산 및 강원도 원주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 귀향을 결심하고 2012년 고향인 강원도 고성지역으로 돌아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늘 고향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

고 있다가 귀향하면서 고성 지역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2012년 당시 사회적기업이라는 좋은 정책적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사회공헌 사회서비스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 되셨는데 문화,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할 때의 장점과 또는 한계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공공재로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은 2013년 이후로 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문화예술 예산이 3%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한 것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와 강원지역에도 경실련 지부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길놀이 공연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축제 공연

A. 2019년 올해에는 고성군이 노리소리강원 두레가 그동안 발굴하여 전승해가고 있는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를 강원민속예술경연대

회 종목으로 선정하여 출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는 조선시대 고성지역에서 세시풍속으로 연희되던 귀한 민속 자료로 향후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의 경우 아직 경실련 지부가 없어서 상호 교류 소통할 기회는 없지만 인근 지역의 경실련 지부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실련 행사에 노리소리강원두레가 운영업체로 참여하거나 노리소리강원두레 주관 행사에 인근 경실련 지부가 지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참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운영하는 고성역사문화연구소,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농가주부모임밴드 등 생활예술 동아리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Q.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신 소감과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나 우리사회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재

능기부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계신 사회적 경제인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Q.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A. 올해 2019년도부터는 그 동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도 7호선 고성여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자 합니다. ☺☺☺



▲ 50여평 규모의 공연장과 미술전시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지역 예술인들의 연습공간으로 개방하거나 예술인들의 작품을 발굴해 전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강원고성신문)

[2018 하반기 경실련 인턴 프로그램 후기] “완벽하진 못했어도 후회 없는 시간들”



강예진 인턴
성신여대 경영학과
kyjkor@naver.com

12월 31일, 4개월간의 경실련 인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첫 출근길 사무실 위치를 못 찾아 빗속을 20분이나 헤맸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끝을 바라보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했던 일들을 적어놓은 실습일지를 쭉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 겪는 인턴생활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일지를 다시 읽다보니 어느덧 추억이 된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시작된 경실련과의 인연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운상가 관련 자료 정리, 청년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 국정감사 평가에 필요한 의원별 감사내용 정리, 부동산 시민강좌 수강,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참관 등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실련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

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세미나 등에도 참석했습니다. 논의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점점 어떠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 회원의 밤 행사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의 교류행사 등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 경실련 원고와 강좌 현장스케치 작성은 평소엔 자신이 없었던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경제정책팀에서는 각종 위원회 참석은 물론,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과 좋은기업상 평가, 재벌 데이터 조사, 세미나 발제문 자료준비,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시민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주된 업무였던 기업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윤을 극

대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지만 선뜻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간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주체성을 띄고 경제적 부정의를 척결하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 속 여러 사회 경제적 현상들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

에 놓여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볼 수 있었던 점은 경실련 인턴생활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경실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턴생활 중 좋았던 점을 꼽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턴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상근자분들,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도 다가와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챙겨주시고 반겨주셨던 회원님들께도 모두 너무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짧게 쓰지만, 한 분 한 분 언급하며 감사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인턴생활에 있어서 서툴렀던 적도 많았을 뿐더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죄송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완벽하진 못했지만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느껴져 가벼운 마음으로 경실련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생활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도, 경실련이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2019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작년 10월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캠페인하며 상근자들과 한 컷 (앞줄 왼쪽이 강예진 인턴)

K-POP에 대한 인식 고찰

김건희 경제정책팀 간사
kgh0726@ccej.or.kr



▲ 노을 콘서트 끝나고 나서 앵콜 도중 (사진제공: 김건희)



▲ 펜타곤 TENTASTIC Vol.5 ~MIRACLE~ 공연장 (사진제공: 김건희)

우리나라 대중문화 역사상, 아이돌 문화는 비주류로 인식되어 왔다.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수요층이 젊은 여성에 집중되어 있고, 음악만이 아닌 외모와 춤을 내세워 왔기에 그들의 음악은 인스턴트화되어 소위 말하는 음악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아이돌 가수들의 부흥기였던 2000년대 후반, 그들이 들고 나와 인기를 얻었던 곡들이 대부분 후크송¹⁾이었던 것도 대중들의 생각이 굳어지게 된 요인일 것이다.

1) hook song. 한 노래에 같은 가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만든 노래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중독성 있는 노래를 통칭한다.

시간이 지나고 음반에서 음원 스트리밍 중심으로 음악 시장의 구조가 변하면서, 음원 인기 차트의 절반은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로 채워진 상황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좁아진 음반 시장 내에서도 각종 시상식 및 음악 방송에 반영하거나, 팬 사인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구매하는 아이돌 그룹의 음반이 매년 연간 음반 판매량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한다.

아이돌 그룹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아이돌의 이른바 홍수 사이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곡의 퀄리티이다. 연차가 있고 인기가 높은 그룹일수록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그리고 팬들의 ‘코어력’ 즉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팬들이 스트리밍²⁾을 돌려서 초반에 음원 차트에 곡이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개별 곡의 퀄리티가 좋을 경우에는 아이돌 팬 이외의 대중들이 많이 듣게 되어 차트 순위를 유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서 아이돌 그룹의 비중이 절대적이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제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닌 해외 시장의 반응 또한 살펴야 한다. 이전에는 동방신기와 보아를 시작으로 많은 아이돌 그룹이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지만, 현재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 미디어 플랫폼들로 인해 해외 음악 팬들의 K-pop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전처럼 특정 국가의 음악 시장을 타깃으로 할 때에는 음악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대중문화 전반의 특성을 이해시켜야 하는 등 ‘단힌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 않아도 음악과 컨셉이 마음에 들면 해외 리스너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 음악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음악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소위 ‘3사’로 불리는 엔터테인먼트계 대기업들이 아직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에 적을 둔 방탄소년단, 세븐틴, 여자친구 등의 그룹들이 국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결국은 흐름을 잘 읽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최신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산업 구조 하에서, 한 해의 트렌드를 예측해 보는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도 많은 비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매년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 문화’로써 배척하기보다는, 하나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



2) 본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뜻하지만, 아이돌 문화에서의 스트리밍이란 음원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음원차트 순위나 영상 조회 수 등의 반영을 위한 작업으로, 아이돌 그룹 팬들의 일 반적인 문화 중 하나이다.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공시지가 인상, 정부의 부당한 개입일까요?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세금폭탄이다, 부당한 개입이다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강남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36%에 불과합니다. 현대차그룹이 평당 5억에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2% 올라서 1.9억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 덕분에 재벌, 대기업, 부동산 부자들만 어마어마한 세금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인상이 아닌 정상화입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작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하고도 거래 정지 한 달 만에 거래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상장폐지가 아닌 고작 과징금 80억이 전부였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포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일가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내세우던 정부의 의지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에 나서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사업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자그마치 70조!!! 이미 4대강 사업에서 본 것처럼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세금 낭비만을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이메일 news@ccej.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

☎ 전화번호 02-766-5627~5628

Homepage



Twitter



Facebook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8. 11.

- 11.12 •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시켜라
- 정개특위 모니터링(3)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 서초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 분양가 검증
-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11.13 • 사개특위 모니터링(2)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11.15 • 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10년 전 수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 공공토지 매각해 부자와 건설사위한 개발하지 말고 서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 사회주택 공급하라
- [기자회견]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1)] 'B급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집값 이야기



- 11.16 • 정개특위 모니터링(4) 공청회 출석 전문가들,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입장 밝혀

- 11.19 • [설문조사] 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험 아니다”
-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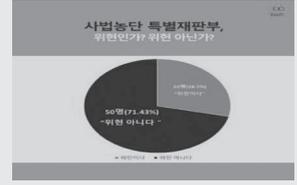
- 11.20 •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 11.21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 11.21 • [기자회견] 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2)] 집값 내리기,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 11.22 • 더불어민주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결코 안 돼
•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험인가? 아닌가?
• [기자회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 11.23 • 정개특위 모니터링(5)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조속히 결단 내려야
- 11.26 •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 [시민포럼]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
- 11.27 • 사개특위 모니터링(4)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 ‘가습기살균제’ 제조 · 유통시킨 SK케미칼 · 애경산업 재고발
- 11.28 •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3)] 사거나, 빌리거나, 위스테이에 살거나
- 11.29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 11.30 • 철도 공동조사,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다



2018. 12.

- 12.03 • 사개특위 모니터링(5)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는 공수처법 반드시 논의해야
- 12.05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선거개혁국회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동참하라!
- 12.06 •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12.06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4)] 왜 지금 토지공개념인가?

12.07 ·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 없는 대법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12.10 ·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12.11 ·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 사개특위, 조속히 회의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 합의하라
· 민생외면, 밥그릇 챙기기로 불신 키운 국회,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으로 개혁입법 처리하라
· [기자회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12.12 · [기자회견]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 [기자회견]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12.13 ·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여의도 불꽃집회 개최

12.14 · 무분별한 토건사업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12.17 ·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기자회견] 5당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자

12.18 · 토건주도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하다

12.19 ·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공급확대 보다는 고장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

12.21 · [기자회견] 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12.27 · [기자회견] 또 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 신훈부부에게 낙망(落望), 구훈부부에게는 절망(絶望)타운





2019. 01.

- 01.07 • 토지공개념의 뿌리인 '공시지가' 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 01.08 • [의견서] 정치·국회불신 해소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야
- 01.09 •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 부정하나
- 01.10 •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 01.11 •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예천군의회 추태, 공천제도 및 해외 연수제도 전반 개선해야
- 01.14 •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 [기자회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 [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 01.15 •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01.16 •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농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01.17 •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 01.18 •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산면제 중단하라
- 01.21 • [기자회견] 정부가 정한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농지국제병원 개원 허기는 엉터리다!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110명, 가입일 2018년 11월 13일~2019년 1월 21일)

강승구	김만수	김종혁	마신혁	배장렬	안정민	이경덕	이인우	장명희	조문영	최현덕
고부섭	김미라	김진필	문영실	배종민	양희욱	이경욱	이재천	장민욱	조선희	최현숙
곽병용	김미양	김창섭	민남순	서경수	엄금자	이교석	이정화	장정호	조정흔	하만철
곽해정	김범현	김춘호	박동수	서원배	오제문	이기순	이한솔	전옥균	조현	하성민
구은영	김병욱	김태욱	박복자	손동석	유현민	이병희	이행찬	정길호	진의준	하신호
권순범	김상희	김학준	박선오	손현식	유현찬	이석호	이혜경	정연경	최영보	한승훈
김기은	김세진	김해정	박성애	송희자	윤예숙	이수연	임노열	정현우	최예슬	한남원
김남균	김영애	김혜신	박재락	신국철	윤준식	이영호	임동범	정휴준	최윤오	홍호진
김덕률	김재윤	나태현	박지령	신록휴	윤형석	이용준	임성복	조규석	최익완	황현주
김동규	김종익	류정호	박찬호	신성호	이갑선	이은영(청림센터)	임재란	조금자	최인섭	황환철

중앙경리선	고지숙	권용희	김근초	김미희	김성수	김영출	김인태	김주영	김태균	김혜숙
	공병욱	권윤정	김금숙	김민수	김성일	김영택	김일수	김주홍	김태균	김혜순
강덕순	공양석	권일민	김금태	김민정	김성중	김예은	김재구	김주현	김태수	김호
강마야	공정표	권준기	김기숙	김민주	김성태	김오열	김재구	김준	김태수	김호
강명구	공진하	권준석	김기열	김병각	김성필	김완래	김재길	김준배	김태승	김호경
강민구	곽기훈	권준우	김기은	김병구	김세진	김완배	김재성	김준식	김태완	김호균
강병철	곽세별	권찬	김기태	김병수	김세진	김완건	김재열	김준영	김태진	김호성
강선미	곽의영	권철민	김길락	김병수	김소라	김용건	김재일	김준호	김태현	김호식
강승규	곽지웅	권혁근	김남덕	김병수	김승식	김용남	김재하	김지연	김태현	김호연
강영권	곽해정	권혁민	김남수	김병재	김수영	김용상	김재홍	김지영	김태형	김호철
강은현	곽효석	김갑수	김남훈	김병주	김승희	김용섭	김재화	김진경	김태형	김홍규
강일환	곽희남	김건호	김대균	김병주	김순득	김용숙	김재환	김진구	김태호	김홍업
강정화	구경이	김경모	김대선	김병학	김순복	김용술	김정국	김진만	김태호	김효선
강주현	구성찬	김경배	김대성	김병호	김승보	김용식	김정돈	김진명	김태훈	김효원
강지영	구수정	김경수	김대중	김보경	김승우	김용철	김정민	김진섭	김태훈	김희연
강창걸	구은경	김경수	김대진	김보라미	김승하	김용하	김정수	김진수	김평진	김희철
강창구	구자범	김경아	김대현	김복연	김승현	김우비	김정완	김진아	김학수	나권일
강창균	구찬희	김경완	김대호	김복환	김시원	김우영	김정욱	김진현	김학수	나병현
강철	권경우	김경준	김동억	김사길	김양규	김우영	김정현	김진화	김한기	나소팔
강철규	권기대	김경철	김동영	김상겸	김양수	김원석	김정호	김진호	김한나	나일주
강철승	권기범	김경호	김동우	김상균	김영진	김원태	김정호	김찬동	김해성	나준희
강태철	권동현	김경환	김동욱	김상영	김연규	김유찬	김정호	김찬석	김현동	남기원
강현신	권득용	김관영	김동욱	김상우	김영미	김유환	김정훈	김찬형	김현석	남상권
강혜정	권만열	김관용	김동훈	김상희	김영선	김윤기	김제후	김찬호	김현성	남상욱
경민수	권봉철	김광배	김래관	김생수	김영섭	김윤두	김종근	김창균	김현수	남원호
계충미	권상남	김광수	김만기	김서진	김영순	김윤석	김종덕	김창선	김현수	남재걸
고강석	권순남	김광수	김만수	김석준	김영실	김용	김종록	김창식	김현정	남현주
고경일	권순범	김광현	김명균	김석환	김영은	김은경	김종묵	김재윤	김현정	남호원
고경호	권순식	김광훈	김명임	김선민	김영재	김은경	김종민	김천	김현희	노상현
고성순	권순용	김광주	김명철	김선욱	김영주	김은섭	김종배	김철	김형규	노연경
고영일	권순탁	김규범	김명환	김선필	김영준	김은영	김종선	김철주	김형균	노재원
고영희	권영준	김규영	김모드	김선희	김영준	김인곤	김종익	김철호	김형조	노재훈
고윤	권영진	김규훈	김무준	김성균	김영진	김인봉	김종찬	김철홍	김형준	노진주
고은주	권오진	김근성	김문환	김성달	김영철	김인숙	김종혁	김철환	김형진	노창수
고은진	권용습	김근수	김미라	김성수	김영철	김인영	김주규	김충환	김형표	노희철
고지석	권용우	김근철	김미진	김성수	(일허스님)	김인철	김주묵	김치수	김혜경	대성운수



라운홀	박민진	박용석	박태선	서은경	송수영	안철원	원동환	윤영천	이대영	이숙희	이정호	인치승	전봉양
류도암	박병오	박용정	박태순	서정일	송연미	안효정	원영진	윤은선	이덕영	이순기	이정후	임건록	전봉진
류시문	박병일	박용제	박태영	서정화	송영주	안희상	원재환	윤은주	이덕희	이순배	이정훈	임명호	전상룡
류중렬	박보성	박용준	박한용	서중대	송용석	안희숙	원중호	윤인오	이동규	이승대	이정희	임상혁	전상용
류중석	박삼중	박우석	박행우	서종철	송원기	안희정	원형민	윤일성	이동석	이승섭	이정희	임서구	전상욱
류지성	박삼희	박원규	박현정	서지훈	송인섭	안희철	원혜영	윤정섭	이동석	이승우	이중규	임성희	전성철
류형욱	박상대	박원석	박현진	서지원	송인윤	안희철	위평량	윤종길	이동엽	이시연	이중길	임세은	전영진
류희근	박상렬	박윤수	박형근	서한송이	송재경	양광열	유관영	윤종빈	이동한	이애화	이중범	임영환	전운배
마경화	박상인	박은아	박혜란	석기영	송하동	양광희	유기석	윤종호	이만호	이연재	이중수	임용기	전용일
마미영	박상현	박은정	박호걸	석철수	신동민	양대규	유기천	윤준식	이명균	이영란	이중열	임용찬	전우영
맹경숙	박상형	박은현	박호영	선동수	신동애	양동호	유기청	윤중식	이명진	이영범	이중윤	임은경	전필기
맹성렬	박석순	박은순	박화영	선우인태세널	신동엽	양두석	유기현	윤지원	이명천	이영을	이중희	임정원	정강자
목영주	박석현	박의용	박화자	선월풍산	신동조	양문수	유남식	윤진철	이명훈	이영중	이주하	임정규	정경욱
문경식	박선규	박인선	박후근	선중국	신동진	양석영	유덕열	윤창원	이모세	이영주	이주희	임종필	정광화
문광기	박선아	박인수	박훈	설원식	신동진	양성범	유동진	윤한필	이방우	이영호	이준오	임형빈	정덕인
문상준	박선오	박재갑	박희령	설창인	신두철	양세영	유동호	윤현식	이봉숙	이용곤	이준영	임태영	정동영
문서연	박선오	박재익	박희선	성광식	신봉기	양수장	유록수	윤효상	이봉형	이용배	이지영	임현진	정려아
문세영	박선희	박재천	박희연	성금성	신영진	양연식	유영진	음유정	이봉훈	이용선	이지훈	장경완	정만중
문소상	박성배	박점수	반영철	성병화	신상진	양원표	유병서	이갑수	이성열	이용승	이진경	장권	정명채
문인섭	박성아	박정민	방상윤	성신	신선철	양유정	유승	이갑수	이상룡	이용재	이진영	장동민	정미화
문장철	박성용	박정석	방정혜	성윤숙	신영철	양윤숙	유애지	이강운	이상범	이용준	이진원	장두호	정병오
문차호	박성정	박정식	방중수	성인제	신영철	양인준	유연삼	이건호	이상복	이운항	이찬영	장문호	정병철
문태현	박성혁	박제화	방효창	세림조경	신원기	양창우	유인상	이경락	이상봉	이원식	이창민	장병호	정삼룡
문현정	박성호	박종국	배동준	디자인	신우현	양채열	유인환	이경수	이상엽	이원재	(철우스님)	장보름	정삼미
민남미	박성훈	박종규	배영환	소경섭	신은정	양태훈	유일용	이경숙	이상엽	이원재	이창엽	장석림	정상욱
민병욱	박세권	박종근	배유아	소비자와 함께	신인철	양혁승	유재경	이경우	이상우	이윤규	이창효	장석춘	정석원
민수영	박세원	박종선	배은경	소순창	신정무	엄원중	유재욱	이경중	이상윤	이운배	이창희	장성현	정석희
민희숙	박세중	박종소	배장수	소재두	신지영	엄청나	유재혁	이경태	이상윤	이운상	이철우	장승진	정신애
박건영	박세현	박종열	배중석	소진성	신철영	여진	유중성	이계인	이상은	이운선	이춘수	장심명	정신철
박경서	박수행	박중우	배천호	손건일	신태현	여해경	유진상	이광열	이상진	이운호	이중현	장영식	정성봉
박경숙	박수기	박중원	배홍진	손경익	신헌호	염규석	유평준	이광택	이상진	이은기	이태용	장영오	정세진
박경준	박수대	박중원	백경아	손무길	신화정	오경준	유해신	이광필	이상철	이은재	이태진	장영환	정세훈
박광태	박수배	박주은	백미순	손봉호	심동준	오길영	유항임	이광현	이상희	이의영	이학수	장욱	정승상
박광현	박수상	박준수	백병성	손상석	심인석	오상준	유현민	이교석	이석규	이인영	이학용	장원택	정승준
박근호	박수욱	박중철	백요한	손성국	심충진	오세형	유현찬	이규철	이석기	이일권	이한길	장유리	정승화
박기서	박승준	박지원	백정숙	손성일	심혜정	오세호	유혜영	이규혜	이석제	이장희	이한민	장은미	정연섭
박기영	박승진	박지혜	백진현	손승태	이름다운한의원	오순택	유호림	이규성	이석진	이재걸	이한범	장일진	정연욱
박기철	박시근	박지환	변동철	손재운	안경숙	오승훈	유호성	이근식	이석형	이재길	이한솔	장재영	정왕규
박기훈	박양제	박진순	변동훈	손정근	안규창	오용식	유희동	이근조	이선신	이재욱	이행섭	장재훈	정용화
박남규	박영규	박진아	변상해	손중보	안기정	오정환	유희숙	이근태	이선자	이재완	이현미	장중철	정운수
박노건	박영규	박진호	변수원	손호중	안병선	오정교	윤건수	이금희	이상균	이재운	이현재	장진희	정원철
박달현	박영기	박진홍	변재근	손희준	안병익	오제명	윤득구	이기승	이상근	이재은	이형세	장찬홍	정원희
박동렬	박영남	박찬호	변창우	송계주	안영훈	오제문	윤영	이기우	이상민	이재임	이혜숙	장철기	정운영
박두영	박영민	박창욱	변현진	송기민	안원용	오중현	윤병용	이기용	이상복	이재중	이호경	장형환	정익호
박두호	박영민	박창임	봉홍선	송기호	안용식	오창훈	이상균	이기호	이세형	이정규	이호섭	장해령	정익훈
박래수	박영수	박철수	서경호	송덕원	안인화	오현석	윤석호	이낙연	이소영	이정남	이호욱	장홍석	정인호
박미나	박영웅	박철주	서순탁	송미영	안정혜	오현철	윤숙자	이낙원	이송수	이정성	이화순	장희곤	정일용
박미라	박영철	박준건	서영덕	송미옥	안중범	오희성	윤여림	이남경	이수연	이정수	이화주	전대홍	정재영
박민수	박영환	박준호	서완석	송병록	안지현	오희택	윤여진	이다혜	이수영	이정임	이훈	전병순	정재은
박민준	박영훈	박치우	서윤석	송병주	안진걸	우호식	윤영곤	이다열	이수연(이주원)	이정현	이희중	전병식	정재진

정재래	조정훈	최성수	한상훈	황선용	권영진	이병준	심재원	문행규	권상동	이은주	김경섭	박애숙	이은선
정재용	조종운	최성주	한석용	황선원	권일	이상협	유주상	박경서	권오석	이정임	김경수	박인근	이장명
정종원	조종철	최성현	한선아	황영미	김경희	이양재	이대순	박금해	김남두	이제영	김기호	박준기	이장표
정주연	조주희	최수만	한성철	황유경	김광만	이유미	이덕우	박성극	김남영	이주석	김기만	박태원	이정택
정준수	조준범	최수진	한승구	황이남	김금옥	이은재	이명근	박용현	김대진	이지은	김대봉	박혜수	이종우
정종식	조준형	최승섭	한승호	황이숙	김기성	이재문	이순기	박은주	김덕기	이진아	김상기	배동주	이주일
정지연	조중현	최승우	한승호	황인구	김덕기	이정식	이영길	박준우	김동명	이효숙	김상일	백순환	이철용
정지연	조진만	최연태	한연하	황인선	김도영	이재선	이지연	박준형	김만재	임명희	김상호	백승일	이헌길
정지용	조진수	최영식	한영관	황정국	김동식	이주희	이진	배인교	김봉래	장선애	김석준	서주종	이형로
정지훈	조진오	최은아	한용환	황철진	김미경	이창수	이창수	배종근	김석래	전규화	김선심	서현주	장석주
정진민	조철제	최원영	한태경	황호식	김석기	이현주	이태호	서관승	김선연	전방욱	김세린	성만호	진갑생
정진우	조현	최원천	함동균	황효열	김성수	이희승	장영	송정호	김선정	전영권	김승권	손성미	진기쁨
정창률	조현성	최유영	함두호	황훈주	김세용	임경수	장윤정	신영욱	김재부	정광민	김승한	손은희	정보진
정창운	조현익	최은진	함성훈		김영	임영희	장진영	신종성	김재준	정석중	김영우	손정식	정석윤
정대근	조형준	최인섭	함영선	경제정의	김재령	임형백	전종찬	안춘훈	김정근	정세환	김영화	손진일	정선우
정대명	주상희	최인호	함형욱	연구소	김재익	장명진	정경수	위정희	김중남	정의호	김옥희	송오성	조승재
정태성	주인권	최일	허남중		김종길	전은호	조영관	윤영전	김진숙	정의훈	김용운	송호석	조오현
정태완	지동섭	최장원	허범녕	김길생	김준현	정성훈	추승우	윤태룡	김진욱	정혜진	김원용	신미경	조치경
정택수	지동익	최재민	허병권	김범	김철홍	정애리	하성용	이상규	김태희	조무현	김임이	신미애	조하영
정필성	지영근	최재용	허석	김지환	김태호	정인환		이우영	김학군	조백훈	김재윤	신부연	진성우
정혁제	지영석	최정표	허수범	김혁	김형욱	조돈철	통일협회	이정호	김형경	진수환	김정수	신용호	진의준
정현근	지용태	최준용	허정준	노영록	나인수	조우현		이정우	김형근	최규천	김중현	신찬숙	진취재
정혜수	지정희	최준혁	허중호	문인철	노두승	조재형	강남욱	이중수	김항식	최복규	김철관	심재국	최상주
정혜수	진상화	최종길	허지영	박상안	노웅래	최강림	강만성	이진만	노영성	최승길	김창집	안미나	최선중
정희성	진영수	최준민	허창재	백승호	도선봉	최두호	강은석	이현희	박상덕	최순희	김종근	양끝선	최운용
정희숙	진원식	최지한	현남원	백종효	류성룡	최명철	고석주	이화용	박운남	최승룡	김민열	엄수훈	최윤숙
정희창	진유식	최창배	형성훈	손창민	류중석	최봉문	고유환	임홍승	박인재	최우현	김민희	여남권	한은진
조강훈	진중화	최창호	홍광선	송운학	민병기	최윤정	곽일환	장인석	반태연	한동준	김필성	여정애	한정용
조강희	차은상	최철호	홍대식	여은미	박경남	최정우	권수복	장형원	배정순	한살림그룹	김한기	오성관	허남두
조건영	차진구	최철호	홍도천	윤연철	박상위	하동익	김근식	전귀정	서은주	생활협동조합	김해연	오성주	허추구
조경민	채대영	최철화	홍미미	이덕호	박성우	함승희	김동규	전영선	송문길	함식	김현호	오순혜	허희경
조광현	채민성	최혁	홍성환	이승훈	박연환	허도한	김병조	정동욱	송민석	홍용표	김효일	육근호	현정임
조광희	채원호	최호영	홍순관	이혜란	박영웅	현철재	김삼수	정승훈	송재석	홍진원	나기석	육방호	홍성태
조규홍	채홍석	최홍업	홍영희	임효창	박정윤		김성호	정창현	신미영	니양주	이양주	육준금	황분희
조근자	천민승	최희수	홍원선	정길재	박찬우	시민	김용현	조광환	신승춘	거제경찰서	남기희	육총석	황한성
조민수	천병우	최희수	홍종학	정홍준	박희정	권익센터	김은수	주석부	심규만	남덕희	남희정	우정숙	황황욱
조병익	최기일	최희준	홍종화	천미림	배웅규		김일한	최우진	심윤보	강경수	남희정	우정숙	
조성하	최광규	추동균	홍준표	최재윤	백인길	김강준	김장철	최평규	심재상	강병주	노승복	원순실	광명경찰서
조성희	최광용	추우성	홍준현	하능식	서민호	김상현	김재기	최호창	심현섭	강성배	노재남	유차상	
조성훈	최광현	하상준	홍진구	홍창식	서순탁	김석기	김재원	추재훈	양창훈	강연희	노재천	유천업	강성철
조성희	최근현	하성민	홍창기	황은경	신행숙	김영미	김정웅	한정훈	원경숙	강윤영	노재하	유태영	강신재
조소연	최기환	하용호	홍효진	황정호	심준신	김태경	김정진	한준구	윤도현	강정숙	류금필	윤길정	강옥영
조소훈	최다니엘	하윤진	최강윤		양우현	김태룡	김정현	홍명근	윤성원	강창수	문삼모	이갑선	강옥희
조연성	최덕천	하재현	황경복	도시	오세형	김택성	김중구	황대중	윤순모	강학도	문상필	이도영	강윤숙
조연정	최덕현	하현아	황경하	개혁센터	월정사	김현아	김주호		이광중	경명자	박광호	이명화	강주례
조용기	최덕호	한건희	황광열		윤재용	나태균	김창석	강릉경찰서	이귀녀	고석진	박대기	이상귀	강찬호
조일홍	최명희	한동환	황기명	고일두	이동근	대호관세사법인	김학성		이규송	고영주	박명욱	이상천	강희규
조재연	최병철	한문희	황도수	공병준	이만희	박병식	김형만	고석태	이숙희	권대용	박성호	이상호	고미라
조재호	최봉문	한상윤	황상하	곽도	이명수	서경수	노귀남	고재정	이요한	기선종합건설주	박수정	이양식	고영원
조정근	최석준	한상일	황선영	곽충삼	이민석	신희권	당명숙	구광범	이윤일	김경덕	박순옥	이은경	고원철



고재원	김정자	박옥남	신혜진	이연숙	조태섭	고부섭	나홍덕	선종아	이성길	조인형	권구일	박현우	정택균
고형복	김종임	박은경	심상록	이영신	조해성	고형석	노희정	설상욱	이승노	조재근	권보	박형진	정택동
곽도훈	김종진	박재철	심준옥	이영희	조혜주	공수현	류현호	성윤형	이연	조재우	권순서	배상길	조경래
곽병미	김진	박재희	심혜진	이원영	조화영	구희선	모현숙	소범환	이은방	조현지	권윤택	백승국	조재형
곽은	김진경	박정선	안경애	이윤식	조홍식	권충화	문병규	손성만	이인수	조형수	길윤옥	변창우	주광정밀(주)
구교형	김진숙	박종기	안석모	이은경	주태진	기우태	문정찬	손점식	이재석	조훈	길효양	성병근	지대근
구차환	김진일	박종미	안철환	이은상	지미선	김경미	문혜옥	손희정	이재윤	주호연	김경훈	성종운	최근애
권순남	김철수	박종빈	양금석	이은영	진장호	김경원	박광복	송원식	이정근	지명순	김귀화	소평진	최낙렬
권혁이	김학준	박종익	양기대	이은재	차병일	김경현	박남규	송윤주	이정량	지병근	김낙관	송철원	최서규
금강정사	김현	박주한	양정현	이재춘	차성미	김광영	박미정	신성원	이정섭	지현도	김도형	신미정	최선경
김가연	김현정	박준서	양철원	이정희	차정운	김기보	박병규	신은희	이정주	차현승	김동욱	신주식	최신호
김경태	김현정	박진석	양희연	이중석	최경자	김길현	박병일	신재안	이정학	차화조	김보준	심재필	최연호
김경표	김현재	박춘선	오광덕	이필상	최경화	김남수	박병주	심재훈	이중성	채인기	김봉교	양진오	최은경
김경화	김현희	박태준	오명희	이현우	최문교	김덕은	박상규	안병주	이중택	채형욱	김성만	오경숙	최자경
김기영	김혜정	박흥기	오민석	이혜수	최미영	김동욱	박상원	안영균	이준영	천재영	김연고	오영재	표상욱
김남권	김호숙	방소현	오성남	이혜진	최상철	김동현	박성수	안현석	이학균	천형욱	김요나단	유준호	하영백
김남현	김희수	배권식	오혜란	이혜진	최영자	김병철	박수경	양동윤	임가춘	천홍석	김윤희	윤달근	허성덕
김남희	나혜진	배덕현	우동훈	이호석	최재석	김성국	박수인	양성호	임동훈	최경주	김은희	윤상훈	허진
김다솔	남기표	배준	우병설	이호성	최철규	김성일	박양우	양현인	임성태	최동기	김은중	윤상덕	홍인수
김동범	남용화	백용구	원범재	임삼례	추규호	김수영	박영덕	양해령	임숙경	최성수	김인순	윤종석	황호숙
김동진	노병일	백정순	유수연	임지연	하숙례	김순재	박용수	염창수	임영범	최영남	김재욱	이관순	
김민재	노신복	변미애	유홍우	임진희	한금희	김연순	박웅	여상구	임용희	최용석	김재훈	이덕수	군산경실련
김민주	노용래	변성수	윤명숙	장선	한상미	김영규	박이화	오경례	임정훈	최윤정	김중배	이명숙	
김범운	노혜숙	변한주	(구름산협동조합)	장진아	한윤선	김영길	박정열	오미정	임정휘	최정구	김중욱	이명희	강양근
김봉섭	노희준	서두원	윤문선	전광섭	한창욱	김영채	박종근	오윤숙	임종연	최종섭	김중율	이미경	고계근
김봉화	류경희	서방자	윤승형	전종석	한홍기	김영현	박종렬	오주섭	임현철	최주영	김준희	이미숙	고덕영
김상열	류미숙	서삼례	윤종미	정도환	한효주	김영환	박준근	오지혜	임형채	최진규	김진곤	이민호	고영호
김선호	류정희	서순자	윤철	정병오	허기용	김영환	박찬숙	오지홍	임형철	최진우	김진억	이상도	김부영
김성자	문진숙	서용원	이강순	정상영	허정규	김용채	박창기	오치홍	장익수	하은이	김진희	이상칠	김영혜
김성희	민찬식	서유리	이건복	정선유	허정호	김용태	박창현	유방실	장익	하주아	김철광	이영애	김원태
김소윤	박경옥	서은경	이금숙	정애숙	허정은	김인수	박철웅	유영표	장춘식	한명석	김현미	이원재	박은아
김수연	박계량	서이석	이기영	정유석	허창순	김일호	박태규	유현	전순위	한샘	김형균	이원희	신규만
김수진	박광수	서태원	이로사	정은영	홍은선	김재석	박형철	윤두중	전홍모	한희주	김휘연	이정진	최종희
김승복	박기은	소문주	이말복	정은희	홍진호	김재중	배백호	윤명국	정강택	허기석	김휴진	이제수	홍관표
김애란	박영은	손선주	이명숙	정인애	황동식	김재찬	배용태	윤봉란	정두석	허문수	김희철	이종률	홍기원
김영미	박문경	손솔이	이미경	정중환	황인란	김정훈	백석	윤봉영	정병호	현광진	김희철	이창형	
김영미	박미경	송경섭	이미희	정지선	황재연	김지인	박영대	윤영돈	정상문	홍영신	나영란	이태동	군포경실련
김영필	박미영	송혜선	이병렬	정진우	김창재	김창재	백익순	윤홍성	정용완	황덕자	나효훈	임은기	
김용관	박미정	신가람	이병순	정찬규	광주경실련	김철승	백종기	은광석	정원태	황동현	노상진	임주석	(주)아진화학
김용길	박미정	신통렬	이병철	정창욱	김철현	김철현	버스조합	이계영	정윤남	황보관석	라병희	정기태	곽도
김원선	박미화	신민선	이복자	정학균	(유용진에너지)	김태욱	변동철	이길남	정은수	황윤웅	박성도	장문석	국정아
김윤권	박민관	신복인	이부순	정해경	(주)대한가스산업	김해룡	변원섭	이동민	정일웅	황인창	박성표	장세광	군포위생
김윤옥	박민영	신선영	이석석	정희균	(주)영암마트	김현	변재영	이명구	정찬용		박순이	장연덕	(원성회)
김윤재	박복임	신성은	이성숙	정희진	(주)해양도시가스	김현모	서문현	이미경	정혜경	구미경실련	박영주	장종길	김대욱
김윤호	박상윤	신성호	이성진	조미수	강신주내과	김현석	서민호	이민원	정혜련		박응도	장준우	김석현
김은진	박서윤	신숙진	이송재	조범상	강은섭	김현중	서상기	이봉주	조광록	강명천	박익숙	장흥성	김애경
김재성	박성민	신영옥	이승규	조상희	강정미	김효중	서상기	이상걸	조광득	강신웅	박재욱	전유한	김연승
김정	박성배	신윤철	이승룡	조아라	고근	나미영	서수연	이상운	조교영	강현주	박정구	전호갑	김영희
김정미	박승원	신은숙	이양희	조옥경	고려가스(주)	나병철	서재형	이성각	조선익	고영호	박정훈	정재봉	김은재
김정숙	박영훈	신혜정	이연주	조은하	고려가스(주)광주	나성영	서해자	이상근	조성식	구자근	박주영	정진수	김재용

김창호	최종식	오홍미	강점문	김선완	박대경	엄봉훈	이진태	조정학	권철명	김현택	신희권	이혜진	최우석
김희라	하수진	웅심이길국수	강호윤	김선희	박동환	엄인용	이진현	주태환	김경희	김현하	신희영	이홍범	최이상
노상래	한성수	원용벽	경희창	김성곤	박병석	예스제이건설(주)	이진희	지우	김금숙	김형태	심영주	이화영	최장환
문홍민	호희국	유양옥	계양엔진	김성택	박병준	여우현	이창건	지창수	김기남	김해천	심승무	임동표	최정우
박노수	황유민	유영록	종합상사	김세화	박병호	오병찬	이창용	차재민	김기범	김홍숙	안병진	임상일	한경이
박상훈	황은아	유호석	고무영	김승환	박승철	오창식	이해숙	차진근	김길순	김환식	안영찬	임성복	한기평
박새봄		윤영자	공영선	김신호	박영식	우동락	이형태	최동학	김대석	노경옥	안재준	임윤택	한동범
박수호	김포경실련	윤미숙	공재식	김영권	박용진	우형택	이호만	최우곡	김동선	농업회사법인	안중훈	장복수	한성림
박정민		이경화	공정옥	김영기	박은영	유성근	이호석	최원아	김명경	호천식품(주)	양미경	장인성	한승동
박지령	(주)남도상사	이경희	곽덕환	김영모	박재락	유성호	이희영	최은영	김명제	대림유통	양석희	장인철	한원중
박지영	(주)신원렌타카	이기형	곽동주	김영섭	박재열	유영익	임윤섭	최종만	김영주	도남선	양승의	장춘순	홍성연
박종수	강명자	이두열	곽광구	김영애	박종률	유영환	임종오	최준호	김병국	명을식	오세윤	장형근	황의달
석경수	김남규	이부형	구성호	김요한	박종익	유양근	장석희	최한석	김상환	문경재	오종섭	장화식	황재익
송석만	김두관	이은학	권기억	김응두	박종철	윤동섭	장우석	최혁재	김성민	문정수	오학석	전국진	
송석암	김문경	이재홍	권대우	김용찬	박준상	윤태우	장원용	최현숙	김성용	박근영	우금옥	전득배	목포경실련
송지영	김미자	이정규	권동일	김용현	박한승	윤현식	장은숙	하경태	김성태	박상도	원용철	전영춘	
신애진	김영로	이정수	권병훈	김위상	박해식	윤형석	장재현	하순화	김승일	박상민	유기원	전학구	강병국
신화	김용훈	이종기	권오숙	김요화	박희경	윤홍식	장해열	한상인	김양호	박성진	유병연	정성배	강병조
엘리베이트(주)	김종열	이종준	권윤집	김인수	배은정	윤희주	장호경	한승훈	김영기	박영순	유인수	정성훈	강성태
심상선	김준현	이호	권태윤	김재범	백승호	이강태	장호열	한종해	김영석	박종대	유정임	정상희	강영태
심재숙	김진희	인희옥	권택중	김정렬	변규현	이경란	전상윤	허인설	김영주	박종석	윤경수	정승래	강재석
안중호	김창집	정일환	권휘동	김종건	변부형	이경애	전상훈	홍승용	김영희	박준혁	윤주병	정우택	강주천
양진우	김철경	정정숙	기영식	김중웅	서영대	이경탁	전성욱	홍승활	김영희	방명덕	이근희	정은선	권인철
양해택	김형창	정희상	기일형	김종태	서정걸	이경화	전영권	홍희청	김욱	방정희	이게자	정인구	김경순
양희옥	남기후	조민진	길성민	김종태	서종철	이근원	전영선	황광석	김원숙	배동국	이광자	정현재	김경옥
오승원	남익선	조승현	김강식	김지현	성윤상	이길원	전재호	황락규	김원희	배효상	이광진	정희대	김경철
우예현	도현순	조영철	김건식	김창수	성창환	이동수	정경선	황병일	김은주	백정웅	이동준	조민정	김관욱
유애순	류문식	조용문	김경민	김천수	손광락	이동영	정성윤	황재석	김용배	백희숙	이범규	조석귀	김광배
육순일	류승범	조용식	김남훈	김천일	손상호	이동호	정연옥	황정현	김용하	변판섭	이병승	조성천	김광창
이경은	문태식	(명신한의원)	김태식	김태선	손상훈	이미정	정영은	황중숙	김인철	서동국	이상민	조순오	김대근
이상운	문현미	조종석	김태진	김태수	손승완	이병화	정은숙		김재경	서영석	이선경	조승래	김두영
이상춘	민경환	주식회사대한진	김도영	김태우	손효진	이병희	정인식	대전경실련	김재석	서영완	이상일	조용석	김명숙
이석진	박광근	공엔지니어링	김도한	김학준	송상수	이봉우	정재근	(주)동그랑	김중선	서재열	이승복	조윤제	김명진
이선덕	박만호	채신덕	김도형	김현조	신동기	이부용	정재영	(주)마루농산	김중하	서정원	이승용	조항범	김명철
이유설	박병돈	최영미	김도형	김형수	신록휴	이상록	정춘수	(주)한미음	김중학	서준수	이시혜	주옥규	김문재
이종암	박연희	최재용	김동석	김호진	신명희	이상운	정태완	(주)한미음	김주홍	서해림	이영수	주정봉	김민희
이현호	박정원	한재혁	김동철	남동강	신영섭	이상천	정한영	푸드시스템	김지숙	서흥원	이용훈	중앙로변가	김보현
이희재	박태순	한혜경	김명수	남동현	신원훈	이상필	정해용	강다은	김진숙	성기석	이윤숙	운영위원회	김성두
임구원	배간웅	허우선	김명혜	남윤환	신중식	이상화	정희교	강명자	김진영	손대근	이윤형	정인수	김성철
장영희	백종일	홍석만	김우중	남인철	신홍권	이석형	조광현	강승연	김창근	송민호	이인세	진동규	김수경
전균섭	신광하	홍성도	김미화	노광해	심병철	이선혜	조규석	강재규	김창숙	송백근	이재민	진동섭	김승호
정미순	신명순	황인문	김민석	노영희	심준섭	이성	조락현	고나현	김중신	송영환	이재영	차정민	김신규
정미영	신상천	황인순	김범현	노윤경	안경완	이상우	조명재	고태선	김패환	송유숙	이정호	주식회사	김영태
조용석	심상용		김병구	류규하	안병천	이연재	조문영	곽기용	김태연	송윤	이정호	주식회사	김예영
조재용	심영섭	대구경실련	김병규	맹일영	안영석	이윤호	조방희	구범림	김태현	송인걸	이정희	(오원관)	김정민
차승희	안철환		김상돈	문상돈	안정민	이재일	조성제	권은남	김태형	송주섭	이중범	최경호	김경아
최경용	양미화	(주)나눔커뮤	김상진	문효상	안종찬	이재필	조영도	권의경	김태호	신상현	이창기	최경훈	김중숙
최범우	양영재	니케이션즈	김상호	민영창	안화석	이정웅	조용식	권재구	김태훈	신선호	이철은	최낙구	김중익
최복희	어중석	김신	김상희	박갑석	양우준	이종경	조용원	권중	김현정	신현진	이현대	최미선	김중호
최은환	오미애	강연환	김석동	박경옥	양원규	이지영	조인지	권중숙	김현조	신혜영	이형복	최봉문	김창세



김태중	양명희	조준봉	고정연	김상태	김종한	문상철(2)	부두봉	신유천	유영명	이상백	임무진	정은선	차동박
김태현	양승희	차경아	공병승	김석준	김주영	문재천	서경국	신정희	유영택	이상진(2)	임우택	정장한	차동욱
김판조	양영주	천현중	구명종	김석호	김주현	박도영	서미화	신철성	유완식	이상현(2)	임종수	정재호	차진구
김하성	양판승	최명숙	구주영	김선년	김주호	박동범	서범수	신항남	유재기	이선희(2)	임호	정정대	차창호
김홍식	어성준	최병기	구효송	김성권	김주희	박미경	서봉원	신현무	유재업	이상권	장귀봉	정중학	천병훈
김희환	오민정	최연식	권명섭	김성근	김준기	박미영	서수금	신형이	유점자	이상열	장다감	정중화	천상수
명근홍	오승주	최완수	권범현	김성길	김진	박민우	서양수	신혜숙	유정기	이상환	장문숙	정주영	천용욱
문귀일	오형열	최일	권성빈	김성수	김진필(2)	박복용	서은정	심건해	유정동	이상훈	장문정	정지원	천정호
문영덕	원오준	최종명	권오성	김성열	김진현(2)	박봉수	서중석	심미예	윤강훈	이성희(2)	장봉주	정진교	천현수
문웅	유경생	최호길	권은경	김성춘	김진홍	박석원	서현식	심상조	윤경만	이승우	장성호	정창오	최남연
민경준	유광호	최환식	권재현	김성호(2)	김창희	박선아	서혜숙	심성구	윤경태	이영갑	장용진	정춘희	최달웅
민찬홍	육준혜	하상복	권태섭	김성훈	김철도	박성수	서호영	심윤정	윤기혁	이영신	장윤식	정치금	최병근
박강일	윤치술	한상호	김가야	김성훈(2)	김춘덕	박성철	서효정	심윤정(2)	윤나영	이영호	장재구	정쾌영	최보규
박근영	이명희	한태연	김갑환	김성훈(3)	김태경	박세간	석승희	심인섭	윤상미	이옥형	장준흠	정태효	최선아
박미영	이문희	홍건숙	김경일	김수미	김태구	박승제	석진열	심형철	윤상현	이용주	장지태	정하윤	최성관
박석일	이범수	홍국선	김경조	김수빈	김태훈	박시우	선근우	아영아	윤석준	이원경	장해욱	정한성	최수영
박석일	이병채	홍근표	김경택	김수자	김태희	박연수	선석렬	안경옥	윤성미	이위덕	장희정	정해균	최승환
박성진	이상권	홍석준	김광식	김승주	김학진	박영봉	설광석	안명석	윤수성	이윤석	전보익	정해명	최영현
박세훈	이성로	홍순길	김필수	김쌍우	김해몽	박영현	설호석	안문상	윤영태	이은희(2)	전선임	정현돈	최원석
박소영	이인수	홍진표	김남식	김영길	김해영	박용주	성병창	안병록	윤재성	이을찬	전세표	제미경	최원용
박송준	이재광		김남일	김영신	김향남	박용하	송병열	안연균	윤재철	이일용	전용배	제연화	최은주
박송채	이정진	부산경실련	김달기	김영옥	김현옥	박용한	손상용	안원하	윤재현	이재정	전우철	조명래	최윤희
박승욱	이종화		김대래	김영욱(2)	김현재	박윤기	손순용	안원호	윤정선	이재호	전일수	조명제	최재명
박영용	이찬식	(주)경성에너지	김대중	김영호	김형균	박재본	손영일	안재민	윤정현	이정남	전진영	조삼현	최재호
박용목	이천호	강경태	김도	김용섭	김혜경	박재욱	손정현	안종일	윤지영	이정민	전천일	조상희	최진욱
박인웅	이철수	강규성	김동명	김용원	김혜경(2)	박재울	손창욱	양대건	윤태환	이정식	전현수	조양래	최철원
박정석	이철호	강대영	김동연	김용필	김호범	박재홍	손창우	양동열	윤현철	이정주	전호열	조연승	최혜경
박정희	이한경	강미라	김동호	김윤경	김홍재	박정구	손치훈	양시경	이강진	이정향	정광현	조영규	탁영민
박중두	이현중	강민석	김명석	김윤영	김홍태	박종덕	손현식	양은진	이경학	이정호(2)	정권영	조용규	하상철(2)
박중범	이형오	강민정	김명섭	김은숙	김홍휘	박중수(2)	송미경	양재화	이귀순	이정환	정규용	조용언	하성훈
박창수	이형완	강병석	김문규	김은영	김훈	박중호	송순임	양종필	이규섭	이정훈(2)	정근	조용한	하순금
박창윤	이홍성	강병호	김미경	김인한	김훈태	박진성	송원섭	양진영	이규현	이중석	정기섭	조유장	하주수
박철수	임종석	강삼욱	김미경(2)	김장섭	남경태	박찬일	송은주	엄세원	이ამ기	이중원	정달식	조윤득	한기성
박한호	장미	강성태	김민철	김재경	남기찬	박철중	송재광	여재호	이남중	이중학	정도영	조윤환	한병무
박해령	장은숙	강시명	김백철	김재명	노경조	박철한	송재은	오병루	이동률	이주영	정동만	조은정	한병철
박혁진	장종국	강예운	김병근	김재식	노광진	박태주	송정숙	오상준	이동윤	이주현	정동순	조익건	한성국
박현희	전종국	강유희	김병기	김재일	노상훈	박한규	송중두	오상환	이동일	이주환	정말순	조종석	한성준
박홍식	전철균	강인중	김병용	김재찬	노영욱	박희선	송중화	오세룡	이동진	이준승	정명길	조준영	한성안
배상기	전철영	강정규	김병하	김정량	노일용	박희영	송중환	오연석	이동환	이중하	정명식	조지혜	한소리
백재봉	정남준	강주하	김보엘	김정민	노효길	박희정	신경근	오지영	이동훈	이진수	정명희(2)	조홍규	한재철
서이채	정명오	강종목	김복준	김정수(2)	도한영	방성애	신군재	오철조	이동희	이진수(2)	정미경	조효제	한중석
송미승	정승임	강태문	김봉규	김정숙	류강렬	배광호	신동욱	오태석	이만수	이청재	정미한	주수현	한효준
송영중	정영창	강필원	김부근	김정숙(2)	류위훈	배성훈	신동윤	옥성애	이명식	(경성유업)	정민재	주식회사무학	허두물
송진호	정진대	강해상	김부민	김정순	류은영	배수미	신만석	옥진우	이미경	이춘구	정상문	주안나	허민도
송홍범	정호원	강형숙	김분이	김정택	류재중	배용준	신병훈	왕인	이민호	이학봉	정상문	주재민	허진욱
송희진	조기석	경규성	김심문	김정현	류정호	배혜래	신상구	우명자	이병기	이현우	정세자	지경아	허해병
신관용	조성익	고명석	김심수	김종구	류종성	배화숙	신상해	우성칠	이병준	이현재	정순영	지은아	허지훈
신재범	조순형	고순생	김상길	김종기	류진호	백평효	신성환	우정용	이병진	이현주(3)	정애니	진동식	홍경자
심재경	조영교	고인홍	김상배	김종기(2)	모삼선	변재우	신승균	원허	이병호	이훈진	정용성	진수진	홍봉선
안영하	조용호	고재일	김상욱	김종민	문규성	변희중	신영호	유수윤	이봉진	이희길	정용수	진효상	홍일표

황범하	김시형	박영종	양해준	이종섭	최동권	김도형	박승원	우양미	이필근2	하순진	정순관	김영숙	박영준
황보승희	김연미	박병훈	어주하	이종식	최동훈	김동선	박완기	유상태	이해균	하창호	정욱석	김영애	박정희
황영식	김영석	박성준	엄경선	이종식	최서호	김동원	박용환	유재성	이현미	한경수	정은희	김영희	박종호
황인	김영식	박성진	엄태영	이주연	최성주	김말순	박원호	윤귀현	이현순	한경희	조병록	김옥경	박준연
황인구	김영아	박성한	오광택	이종길	최승명	김미선	박윤환	윤두천	이호섭	한곡지	조택용	김옥수	박태순
	김영호	박세찬	오모현	이진여	최애리	김미정	박은호	윤미경	이희수	한상율	주지은	김유경	박해부
속초경실련	김용일	박수경	오승택	이진형	최영미	김민수	박익종	윤석신	이희숙	한창균	현고(임승남)	김윤재	박홍래
	김원기	박승민	오윤택	이철	최용석	김복녀	박재관	윤희경	임용순	한창석	홍상우	김윤희	박희경
(주)강원오로	김원일	박영덕	오홍월	이태열	최유정	김봉균	박재순	이경섭	임채란	한풍교	황이병	김은주	배종민
강동우	김유경	박영희	원은주	이필선	최종현	김성연	박재현	이경환	임태정	허성균	황인용신	김정란	백영국
강미심	김유리	박용기	유성봉	이필순	최지문	김시영	박준배	이금희	임혜경	허윤범	경과의원	김종길	시정열
강성태	김은희	박정민	유영민	이현미	최지인	김영기	박진순	이길영	장명옥	허현태		김지영	시해경
강신길	김인섭	박종갑	유영창	이호석	최진철	김영래	박찬호	이명욱	장성근	홍시준	안산경실련	김지영	석진성
고영진	김일환	박종학	유종완	임대식	최택수	김영태	박태경	이민구	장점숙	홍영호		김지훈	설점순
고인선	김재학	박종현	유주희	임시연	최형덕	김완동	박형순	이범선	정계화	홍중수	강경호	김창근	성준모
고종문	김정식	박종훈	유혜정	임종희	최혜경	김용일	박화진	이범주	정문호	황경희	강기성	김창모	손현주
고현주	김정인	박희식	윤광훈	장경민	최효섭	김용철	배창수	이병희	정수진	황대호	강수진	김창하	송창식
공정관	김정훈	박영덕	윤규식	장성원	탁동철	김용	백순자	이상명	정순혜	황민석	경상수	김철환	신남균
곽병용	김종담	방대식	윤기순	장은선	통일자동차	김은하	백혜련	이상애	정양훈	황성우	고관	김초환	신동국
곽종환	김종윤	배석진	윤신남	장재수	공업사 고성관	김인석	변영선	이상해	정원제	황용원	고미나	김춘호	신용관
권종식	김주철	변성수	윤재훈	장재환	한살림	김장일	서상범	이상호	정지운	고영인	김태훈	신정환	
길목	김준섭	변인미	윤재희	장주열	한상민	김재기	서수정	이상희	정태정	속천경실련	곽도훈	김해만	신청하
김 철	김진태	서영기	윤정은	전용성	한성희	김재성	서정근	이수행	조경두	곽병용	김해정	심규호	
김경석	김진태	서은진	윤준	전이령	한정숙	김정욱	서환	이승호	조규만	강성민	곽태영	김현삼	양근서
김경순	김진희	석명환	이건욱	정봉재	함국기	김종석	서홍석	이영인	조병모	강철호	권은심	김현호	양태호
김개남	김진희	선영복	이경상	정상철	함준식	김종선	성기원	이영주	조석환	강현주	권대근	김형욱	양현석
김남춘	김천수	소문섭	이경애	정순희	허우린	김종오	성명순	이용욱	조승백	김미정	김경민	김혜숙	오관영
김동수	김철민	손병섭	이관	정양연	홍련암	김종환	성현구	이용호	조영춘	김선명	김경숙	김혜영	오남숙
김동순	김철수	손재복	이기원	정연미	홍명관	건축사사무소	손성배	이운창	조은석	김성준	김경애	김호득	오은석
김말순	김철환	송경희	이대복	정용주	홍인숙	김준혁	손현미	이원욱	조형훈	김윤아	김경욱	김희공	오정순
김명섭	김춘식	송제철	이돈섭	정원모	홍진희	김직란	송원찬	이원재	주광애	김중선	김경하	나정숙	오진호
김미정	김충남	송종철	이동균	정윤희	홍해용	김진한	신경환	이윤규	주영수	김준호	김기범	남기순	오현주
김미정	김태영	신대섭	이문규	정은희	황시영	김창극	신동섭	이의봉	주영훈	김지훈	김기희	남양숙	오현주
김병욱	김형걸	신선익	이문성	정진용	황영필	김종관	신한미	이재득	지영호	김현덕	김대일	도원중	왕은희
김부석	김형기	신영근	이문영	정흥기		김해영	심재광	이재문	진대주	김혜선	김동인	류영숙	원미정
김상기	김호준	신재민	이미경	조광덕	수원경실련	김현태	심한주	이재식	진송주	나창수	김명연	문강섭	유창희
김선일	김희근	신종출	이봉진	조명수		김혜련	안필규	이재혁	진한중	박재현	김미영	문버들	윤다미안
김선철	김희정	신창승	이상정	조성열	(주)청영	김효근	안혜영	이정원	최문태	박철우	김민	문연숙	윤명숙
김성권	남상진	신현식	이상호	조현국	건설 - 최영옥	김훈	양우혁	이정하	최병정	비손이앤씨	김민진	문정원	윤상민
김성근	노금희	신홍사	이수영	주대하	김미경	나민수	양재철	이종령	최석환	서용현	김병재	민병권	윤성용
김성미	동병희	심연홍	이언우	주영래	강민철	나태성	양진하	이종만	최성배	신현일	김복희	박경용	이갑순
김성욱	라용일	안경민	이열호	주용현	강인선	남택진	양홍석	이종주	최영숙	오정록	김삼엽	박경중	이강숙
김성울	문재용	안경수	이영선	진장수	강학천	노종용	염규용	이주연	최은호	위미영	김상혁	박경태	이경란
김수자	민현정	안국자	이영수	진형배	강희진	도진욱	예인기	이주현	최인수	이상휘	김석용	박금자	이경석
김수정	박경미	안세준	이영순	천성미	고병역	명홍진	오동석	이진성	최인자	이욱기	김성봉	박동신	이경진
김순복	박경심	안종석	이우영	천성필	고재홍	모성은	오세환	이찬용	최재훈	이종철	김세영	박성진	이근미
김순봉	박경자	안종원	이은희	최관식	권후남	민경록	오완석	이창모	최진학	이천오	김세원	박승렬	이미숙
김승길	박근철	양언석	이인숙	최근석	김경수	박다예	오일용	이창진	최진환	장동식	김승철	박승희	이민근
김승숙	박덕희	양영희	이재선	최길순	김경호	박동선	오지현	이판수	최찬호	장문석	김숙희	박양희	이벽희
김승철	박만용	양진옥	이재정	최돈환	김기덕	박복자	오해경	이필근1	하만호	전대길	김영림	박영욱	이병욱



이선희	최복수	김은숙	안영일	장현실	김미순	이천여주	김선일	김형식	박창렬	안창호	이대현	이충환	조은미
이선희	최영화	김주남	안은경	전승희	김성춘	경실련	김선희	김호열	박태문	안철한	이명신	이현표	조장래
이숙경	최운	김지연	안정희	전재은	김숙자		김선희	김홍태	박태문	양정분	이미희	이해철	조정숙
이숙관	최윤정	김진영	안태희	전재현	김신	강경모	김성국	남기태	박형국	양희진	이박우	이현숙	조종성
이양주	최임이	김창현	여현정	전종덕	김영표	강석립	김성국	남용대	박홍재	엄기홍	이백선	이현숙	조철현
이옥희	최재우	김한일	염충	정동균	김점자	강신욱	김성길	노필원	배경희	엄태희	이복수	이현호	조순순
이용진	최채림	김햇님	오경아	정연준	김정선	강영애	김성완	뚜레쥬르	배정수	엄희용	이부경	이현희	조택선
이정민	최현수	김현진	오성탁	정영수	김종구	강정순	김성재	창전사거리점	배증열	여재혁	이상년	이호돌	조택선
이정아	하은희	김호수	유기용	정주영	김주환	강창영	김세동	류시근	변영구	여한수	이상원	이호영	조한영
이주옥	하혜경	김루승	유남숙	정하성	김향우	고경애	김수동	마상호	변정해	오근철	이상태	이호일	조휘명
이창수	한수연	남화선	유상진	정혜경	김희선	고윤지	김숙현	마석홍	변정해	오명환	이상혁	이훈	주상운
이천환	현유경	노국환	유선영	조경송	박병규	고인정	김순업	마석홍	부태길	오병재	이석환	임명원	주상운
이필상	형천호	류호웅	유영표	조삼현	박복숙	공미선	김순업	마세진	빈중진	오석호	이선	임상열	지소연
이해나	홍경남	박기두	윤경일	조재국	박선애	구경혜	김연희	마애진	빈중진	오성순	이선정	임선미	지정철
(하은녀)	황영순	박민기	윤덕규	조춘선	박성현	구준모	김영근	목현실	사단법인	오성용	이상창	임성규	지효숙
이현선		박보정	윤수영	조항욱	박숙희	권광일	김영숙	문미자	에이트참빙	오형선	이순창	임성식	진선중
이희대	양평경실련	박석두	윤정원	조현주	박연호	권순원	김영자	문승옥	서성원	우근배	이승남	임승한	차준은
이희연		박성진	윤종대	조효미	배선주	권순원	김영자	문은래	서원교	우순애	이양순	임은혁	채봉수
임명자	강병국	박수형	윤형로	조은아	서영남	권영미	김영준	민승래	서은숙	우순희	이영우	임철만	천기영
임미선	강신우	박애경	이경우	진랑규	서호영	권영배	김영춘	박경룡	서재호	우종만	이영채	임현권	천병기
임현규	강원정	박옥경	이그루	채현	신재현	권영진	김옥자	박경미	서정순	우현녀	이영현	장경자	천재영
장동근	고봉철	박장수	이길한	채풍목	심경택	권영훈	김왕고	박기환	서희숙	원경희	이영훈	장교환	최대규
장동일	고혜란	박태원	이대형	천귀선	심재수	권오섭	김용섭	박명순	성주영	원중순	이옥희	장영란	최동규
장미진	곽영규	박현일	이동연	최갑주	안성용	권오주	김용태	박명철	성희연	유경윤	이용근	장원섭	최병주
전춘호	구민진	방민경	이동준	최두영	양삼덕	권혁봉	김우재	박병건	송경은	유상열	이용만	장원주	최병탁
정명숙	권오병	배만병	이명규	최석운	오승석	권혁왕	김윤경	박병대	송영득	유상희	이용연	장재훈	최복순
정세진	김경덕	배연정	이명춘	최성범	윤주현	기보중	김은이	박상옥	송영득	유승열	이우정	전상진	최성원
정승현	김경수	배우한	이미순	최소영	이상미	김준	김은하	박상용	송이식	유재경	이운용	전성호	최옥명
정안철	김경철	백종덕	이반석	최영보	이시	김강산	김은희	박상임	송정호	유재춘	이윤숙	전영석	최용철
정연주	김경희	서동일	이선희	최영식	이유형	김경건	김은희	박선규	신계영	유혜란	이은자	정병관	최은용
정연철	김광윤	서시은	이수진	최영준	이정희	김경림	김의섭	박선영	신덕선	윤광석	이의성	정선욱	최은실
정용기	김대우	서진숙	이승용	최진식	이철	김경림	김인기	박성희	신동신	윤남선	이익재	정성기	최인근
정은식	김덕현	선유하	이연호	하보균	이평호	김경자	김재순	박수자	신동윤	윤남용	이재범	정순현	최인식
정은혜	김동운	성종규	이영주	홍성현	이항월	김경중	김재임	박양래	신동천	윤수영	이재학	정승수	최재화
정이진	김동현	송명원	이완용	홍승희	임호상	김경화	김재홍	박옥선	신두임	윤수영	이정길	정욱형	최정관
정정순	김명주	송영배	이용성	황규영	장준배	김광식	김정범	박인	신영호	윤준호	이정형	정윤지	최정숙
정종길	김명해	송요찬	이의협	황순찬	정남숙	김광인	김정수	박인오	신원재	윤태범	이정형	정윤지	최정화
정주호	김민석	송진원	이지형		정대훈	김금녀	김정천	박일엽	신은수	윤향숙	이종송	정은희	최종
정진옥	김민정	신권대	이정숙	여수경실련	정승환	김기석	김종원	박재선	신중옥	윤희태	이종한	정은영	최종
정철욱	김성동	신도선	이종인		정정식	김기열	김진영	박재우	신중옥	은종원	이주윤	정은희	최종악
정해옥	김수은	신민희	이지연	강규호	정주현	김기은	김진용	박전희	신철승	이강문	이준호	정인우	최준봉
제종길	김순옥	신상문	이지은	강성훈	정차섭	김기태	김진창	박전희	신해진	이강수	이중재	정일구	최현희
조경래	김순이	신순봉	이철규	강용원	제윤경	김길홍	김창균	박정하	심관보	이경수	이진관	정춘화	하맹수
조안호	김양수	신승한	이태환	고용국	조현혁	김대축	김창수	박정화	심규대	이경호	이진혁	조경국	하준순
조은정	김연호	신영희	이항란	공성식	천상국	김두환	김준자	박종구	심형모	이광석	이찬우	조계만	하태길
조재기	김영선	신정원	임다정	권인홍	최경자	김미혜	김학경	박종우	안병운	이광윤	이창규	조길문	하현홍
조충현	김영학	신희정	임승기	권진구	한병세	김병기	김학재	박종욱	안봉섭	이광재	이창수	조남술	한덕이
주만수	김영환	심민규	임정지	김동식	한해광	김병수	김학훈	박준모	안신실	이광호	이창수	조병돈	한덕이
차은숙	김용필	심재식	임진택	김동채	홍신아	김상실	김현미	박창근	안재영	이길수	이찬수	조생남	한돈집
최경숙	김은미	안경모	장영달	김명주	홍춘식	김선우	김현숙	박창근	안정민	이길윤	이준석	조용월	한만준

한순택	고덕봉	김연옥	도지성	사단법인 인헌	유진성	이종일	조광희	허도병	유창엽	김현	김석	이성호	김수용
한영순	고성일	김연옥	류병희	복합운송협회	유필우	이주영	조금숙	허우범	윤영수	김현	김진호	이진수	김영호
한영옥	고재성	김영구	류제홍	서경옥	유홍성	이주용	조동임	허중식	윤태영	김형보	김성수	임숙자	김용진
한은상	고정규	김영국	명선목	서부길	윤관옥	이준한	조복순	허주형	은영주	문성대	김성준	임정현	김재완
한은상	공규현	김영수	명창준	서용성	윤대기	이지영	조영희	허창희	은용우	문정수	김세검	장성욱	김중우
한정민	구자길	김영옥	목동훈	서재송	윤동구	이진준	조용철	홍기석	이민호	박래수	김수연	장원석	김진태
한정현	권경자	김영준	문상범	서주선	윤명철	이찬우	조용화	홍애경	이보향	박영민	김승필	장정훈	김철수
한준학	권남구	김옥산	민경석	서주원	윤미선	이창훈	조현경	홍옥표	이승현	송민수	김신숙	정상철	김태명
한준호	권미정	김용구	민근홍	서태원	윤월성	이철준	조현정	홍인성	이영식	안중선	김신순	조문수	김태호
한준희	권오연	김용미	박경호	서해안	윤지의	이충우	조현준	홍인식	이장춘	유사현	김양보	조시중	김행조
한희자	권옥한	김용민	박명희	성기건	윤천준	이한용	주춘식	황규철	이재윤	이광호	김영남	채호진	김혜영
합연자	권정호	김우경	박민서	성덕규	윤호	이해우	지건태	황덕성	이정수	이상길	김영희	한남석	김홍철
합연자	권혁철	김원화	박상문	성용원	유희정	이현경	지석	황석광	이정	이상실	김우준	한용환	김효실
허립	김갑봉	김윤식	박상찬	손병옥	유희택	이현준	지용택	황수연	이현희	이용관	김원규	허정아	나야란
허벽석	김진수	김윤태	박상희	손장원	이경우	이형구	진인주	황용선	임규삼	이창희	김은숙	현경호	내일시스템(주)
허수행	김경태	김은경	박석민	송경희	이경진	이후삼	진혁화	황재우	임명진	차운호	김익태	현계담	노덕우
허임범	김경호	김은영	박선홍	송문성	이귀복	이흥우	차경열		임성진	최성열	김인성	현미영	노은식
허준환	김계원	김은환	박성인	송원덕	이근영	임승구	차광운	전주경실련	장석재	최종범	김인영	현종철	류임상
허준환	김관호	김용철	박수영	송인선	이기태	임승관	차동열		전기환		김정수	현찬석	류지현
현주석	김광업	김의식	박소옥	송태영	이길성	임준택	차득기	강원균	정세운	제주경실련	김중훈	홍기홍	맹창호
홍경아	김광호	김인수	박시우	신국철	이다빈	임재훈	최경주	강유정	조선환		김진심	홍서희	맹진아
홍성동	김근영	김재식	박옥희	신병철	이도희	임한택	최경훈	강창수	조찬완	강경희	김창기	홍성화	박미경
홍원표	김남근	김재영	박용해	신윤희	이동기	임현준	최광용	강현민	주재호	강봉석	김창연	황경수	박민숙
홍은하	김대중	김종길	박윤수	신은철	이루다	임희숙	최광은	강호수	진정현	강영준	김철수	황병철	박민자
홍종민	김도영	김종욱	박정남	신종한	이리라	임희진	최규재	고동우	채주석	강예달	문건식	천안아산	박상돈
황경애	김도현	김종호	박준용	심연삼	이린우	장일진	최금행	곽이구	천상덕	강유심	문영실	천안아산	박상돈
황규문	김동우	김종화	박진영	심정순	이문의	장정민	최두영	국승철	최낙용	강인창	박미현	경실련	박상면
황규문	김동호	김주우	박찬화	심현창	이범열	장조영	최병길	권미경	최동성	강정임	박재완		박수석
황인동	김두영	김진영	박창화	씨테인보우인	이병기	전동춘	최상희	김만식	최문희	강지용	변성언	강민숙	박종갑
황인재	김말숙	김진희	박한정	태내서넬(주)	이병철	전무수	최선애	김병석	최요일	강창균	변정철	강용봉	박종복
황현숙	김명석	김창선	박현숙	안동찬	이상동	전성식	최성원	김수환	최정일	강태운	부상원	강은선	박태서
	김명제	김칭우	박형수	안병준	이상영	전영진	최성을	김용권	최진희	고광희	송석연	강인영	백우현
인천경실련	김우룡	김태호	박형중	안재균	이상훈	전웅성	최성진	김용휘	한병규	고미선	송순	강태윤	북아영
	김미경	김태훈	박해숙	안희섭	이석률	전준권	최순자	김장기	홍순필	고병기	송승호	강희두	서상욱
(주)디씨알이	김미영	김하운	박홍열	양광범	이상한	정기호	최인동	김중원	황병해	고봉수	신용호	고영술	서현숙
(주)진영이엔지	김병수	김학무	방광설	양의만	이애경	정낙식	최일동	김주희		고상봉	안영철	구지형	소삼영
최춘옥	김병우	김현식	방수환	양희석	이연숙	정두용	최재혁	김형식	정응길	고석건	양문석	김명기	송동호
(주)한성라인	김병철	김효정	방종설	염연주	이영권	정미경	최정자	라형연		고성봉	양백운	김경은	송홍석
강경하	김복수	김희연	방호운	에스지이(주)	이용우	정석환	최정철	박규만	강창조	고영수	양복심	김기완	신대식
강덕우	김상길	나영우	배성수	여승철	이용준	정선오	최준혁	박명진	고광호	고영식	양복석	김기태	신동현
강명선	김상섭	나종팔	배승휘	오경환	이원구	정승연	최찬용	박복희	고세창	고정훈	양시경	김길년	신영철
강명수	김상열	나종훈	배철현	오광민	이윤성	정연중	최현	박상민	김선일	고태식	양우선	김명호	심숙희
강산근	김선홍	남봉현	백동수	오세광	이응복	정재영	최혜자	박효민	김영진	김경용	양효진	김문수	안주형
강석	김설	남세중	백민섭	오월명	이의재	정재윤	하석용	성치원	김용복	김남혁	오승용	김미경	양경모
강석철	김성근	남지승	백완근	오원선	이일희	정지은	한기남	송약용	김용철	김동욱	오영익	김미수	양승조
강신원	김성수	남창섭	법무법인	유동현	이재학	정진오	한만송	안수현	김은정	김동전	오정훈	김봉미	엄금자
강옥엽	김성태	남홍우	케이엔피	유승분	이정림	정창훈	한상열	안정훈	김을수	김명준	오중선	김상관	우수균
강인덕	김수자	노국진	인천법원지법	유재진	이정윤	정철	한창원	양창훈	김일중	김봉석	유덕현	김상철	오승화
강정호	김승남	노승환	변성준	유준호	이정희	정화석	함지현	염상섭	김재오	김봉철	유두석	김성현	오인철
강태경	김시철	도영운수(주)	변태수	유지상	이중우	정희윤	함창학	오상현	김택술	김봉희	이명자	김세곤	유영길



유영진	하종률	김경자	김승일	김주복	대신정기화물	박연수	서울고교(주)	신태경	오석승	윤석위	이선우	이찬호	전년규
유재영	한광수	김경자	김수열	김준경	지동채(주)	박영미	서준철	신해운	오세란	윤승현	이수복	이창록	전병선
유진영	한문식	김경중	김수정	김준년	도경민	박영순	서효석	신현규	오세봉	윤여일	이수영	이철중	전용필
윤권중	한형규	김경호	김수환	김준봉	도선봉	박용연	석명용	신현식	오연경	윤정수	이수한	이철희	전용표
윤예숙	허종일	김계옥	김승효	김준수	도승기	박은경	선종열	신희숙	오영미	윤진현	이순남	이한례	전우석
윤일규	황규훈	김관식	김애영	김준태	두깨비실업	박익규	선지연	심규석	오영애	윤찬열	이순호	이해승	전창해
윤정섭	황종현	김광남	김양식	김지연	영농조합	박인기	설경철	심상학	오영필	윤태한	이승배	이항숙	전형천
윤주만	황천순	김광복	김연식	김진철	라윤애	박인숙	성기남	심수영	오윤주	윤한식	이승준	이현수	전희택
이경주	황환철	김광성	김영근	김진호	류규식	박인자	성창기	심영미	오재만	윤현우	이승준	이현식	정길재
이계환		김광지	김영란	김창석	류근모	박인환	성환용	심재원	오제세	윤호영	이애선	이현주	정란희
이명근	청주경실련	김광희	김영란	김천식	류근운	박재경	소소창	씨투넷(주)	오중영	이기빈	이연옥	이형각	정문섭
이병덕		김교선	김영민	김철	류덕환	박재관	손세원	안병대	오준영	이건철	이영로	이형우	정미화
이상일	(주)세일	김규설	김영배	김춘희	류연옥	박재익	손순희	안영숙	오태경	이경수	이영숙	이혜정	정병숙
이상춘	(주)중부컴퍼니	김규원	김영식	김태성	류용걸	박종관	손정훈	안윤숙	오태진	이경순	이영진	이호상	정상섭
이상호	강민오	김기영	김영재	김태성	류우열	박종국	손효진	안정현	오훈영	이경희	이영희	이화련	정상신
이서영	강병호	김길후	김영태	김태희	류재욱	박종룡	손희준	안종태	오희	이광식	이옥구	이효숙	정상완
이선열	강석형	김남진	김영호	김평환	류재형	박종을	송광희	안창만	이상동	이광용	이옥인	임건철	정상래
이수현	강성래	김대광	김영환	김필재	류지봉	박지연	송길화	안창현	우장명	이광희	이유정	임근수	정성희
이순근	강승구	김대웅	김영환	김학구	류진호	박진우	송미애	안태희	원광희	이귀숙	이윤범	임기중	정수창
이승열	강은희	김대중	김영희	김학민	류찬걸	박철규	송선호	양계인	유경훈	이귀형	이은숙	임노열	정순배
이원자	강진성	김대환	김원희	김학실	류학천	박철석	송은숙	양기정	유광선	이규진	이인우	임동현	정연경
이재천	강현구	김동수	김용규	김한솔	류현숙	박철완	송의천	양기춘	유광식	이기정	이일우	임미애	정영래
이정순	강호문	김동암	김용덕	김현상	리드산업	박해순	송일근	양미선	유국열	이길재	이장희	임병락	정영섭
이종필	강호승	김동욱	김용석	김현주	개별(주)	박현순	송재경	양승주	유근수	이길환	이재덕	임성중	정영희
이종호	경준용	김동일	김용태	김현진	마재광	박호표	송재구	양영순	유미숙	이대응	이재숙	임순옥	정우성
이철호	고상돈	김동진	김용학	김형규	맹경제	박홍래	송재봉	양원철	유민상	이도영	이재영	임승빈	정은경
이혜린	고영구	김동현	김용규	김형우	맹석주	박희분	송재섭	양찬섭	유민채	이동로	이재영	임용현	정은희
임승안	공공디자인이중	김동환	김원식	김혜숙	맹현숙	박희자	송태성	엄경출	유선우	이동진	이재원	임은정	정인수
장기수	곽규은	김두호	김유호	김호숙	문성오	반영운	송태화	엄승용	유성훈	이두영	이재은	임일수	정일기
장순이	곽나현	김말숙	김유모	김호일	문종극	반주현	송혜근	에듀크리인트	유순영	이만형	이재춘	임재규	정일택
장원철	곽덕신	김명수	김은옥	김홍구	문희창	방현철	송효현	여명수	유승덕	이만희	이재현	임중승	정장영
장재식	곽승호	김명자	김응철	김홍성	민경억	배병기	송희삼	연규순	유시송	이명순	이정규	임지민	정재량
전순예	구남휘	김문옥	김인숙	김한국	민광기	배응환	신경아	연규용	유영경	이명호	이정석	임차남	정지성
전오진	구병희	김미숙	김인자	김황래	민선희	백미경	신국희	연방희	유영숙	이명훈	이정수	임한빈	정지영
전옥근	구안서	김미연	김일경	김호일	민승기	백승협	신규식	연영규	유영아	이미경	이정아	임한수	정진아
전종환	권경미	김민호	김일복	김희수	민창식	법무법인 주성	신동선	연영태	유응모	이미순	이정희	임희경	정진화
정구봉	권기승	김병우	김재복	김희숙	박관주	변만수	신동예	연인하	유재남	이민영	이중수	임희영	정진하
정미영	권미경	김병의	김재숙	김희식	박광수	변민수	신명섭	연지민	유창범	이범석	이종실	장경석	정찬영
정병인	권성안	김봉주	김재춘	나채경	박금순	변상호	신명수	연철흙	유철호	이병관	이종운	장남운	정철
정성진	권수복	김상우	김재학	남기상	박기환	변성민	신명숙	염경수	유종욱	이병호	이종한	장동대	정중선
정진선	권영기	김상수	김정문	남기현	박남순	변은영	신성길	염우	유행열	이복순	이주봉	장병순	정태진
정지화	권오건	김선영	김정웅	남성욱	박문희	변의수	신성일	염은식	유현덕	이상규	이주선	장병희	정희승
정하진	권은은	김선희	김정일	남윤빈	박미애	변장섭	신성철	오경숙	유환철	이상식	이주형	장선배	조경주
조영주	권태성	김성민	김정초	남준순	박미영	변필섭	신승주	오경아	육미선	이상정	이준수	장영건	조경주
조하심	김갑용	김성수	김종구	네모토	박범혁	봉원진	신언관	오국진	육종길	이상중	이준희	장재봉	조규완
주진혁	김강일	김성식	김종기	마사쯔구	박석현	봉윤근	신영창	오명진	윤건영	이석구	이중섭	장홍래	조규호
최경식	김건도	김성중	김종철	노근호	박성순	서건석	신영희	오명환	윤관수	이석호	이중현	장홍원	조동순
최경영	김건일	김성천	김종철	노만균	박성호	서길용	신용재	오미정	윤미정	이석희	이중훈	전광호	조동욱
최석남	김경배	김성호	김종태	노재량	박세복	서미화	신용한	오병건	윤병선	이선미	이지숙	전금희	조상현
최장은	김경애	김성희	김종태	노진호	박세웅	서완석	신철영	오상록	윤병희	이선순	이지영	전길자	조성구

조성오	조항전	차은녀	최상범	최종예	하태중	황창모	황경수	김남철	박상규	유제원	이희창	최희수
조수중	조형규	채희관	최상영	최종익	한법덕	허석렬	황락훈	김대영	박형일	윤장혁	임재선	춘천상공회의소
조승연	조혜경	청주농산물시장	최상천	최종현	한상화	허성만	황미화	김석중	방명열	윤재경	전규호	하상준
조영화	주서택	가시업협동조합	최상희	최진옥	한성원	허영	황선건	김영준	방수진	윤재선	전근우	한희민
조용숙	주식회사 태양	청주산업단	최상희	최진완	한승환	허창원	황성주	김정현	변용환	윤진현	전동준	함태성
조원주	커뮤니케이션	지관리공단	최영중	최종진	한연수	현상주	황종빈	김진상	변좌용	윤학로	전만식	허영준
조윤행	주식회사	청주생활용품유	최우식	최태호	한영선	현진	황희연	김찬중	석영기	이관행	전성휘	허정현
조은애	팜필리아	통사업협동조합	최운침	최현숙	한원영	형미희		김한택	손헌기	이복연	전호성	허종영
조을선	주재구	청주성안길상	최원호	최형도	한은례	홍강희	춘천경실련	남형우	손흥주	이상섭	정익성	황덕호
조일원	주재현	점가상인회	최윤정	최호균	한인섭	홍성학		박경철	송창근	이석원	정휘돈	황해숙
조정식	주창백	최각규	최은실	표한홍	한정현	홍성학	고태규	박대진	신선철	이승준	조성모	
조종호	지동규	최경천	최재국	풍경섭	한종실	홍승표	권용범	박도수	안호춘	이원규	조성자	
조진희	지유석	최경호	최재일	하옥란	함명옥	홍우표	길정숙	박동운	양태식	이은영	진정철	
조창영	진중현	최맹섭	최종문	하재성	함종철	홍응표	김광배	박미현	윤준형	이인섭	최영진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국제팀	02-766-5623	간사: 정호철
기획교육팀	02-766-5626	팀장: 노건형, 간사: 최윤석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팀장: 김성달, 부장: 최승섭, 간사: 장성현
회원홍보팀	02-766-5627-8	팀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이성윤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4	팀장: 권오인
경제정책팀	02-3673-2143	팀장: 권오인, 간사: 오세형, 김건희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팀장: 남은경
정치사법팀	02-3673-2141	팀장: 김삼수, 간사: 서희원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팀장: 윤철한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간사: 조성훈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팀장: 윤철한, 간사: 정택수
사회정책팀	02-3673-2145	팀장: 최예지	월간 경실련	02-766-5627	이사: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고영삼, 간사: 박항미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유영아 간사: 김미진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서해림 갈등센터 국장: 김원숙, 부장: 이선경	거제경실련	055-637-9451	간사: 배동주
부산경실련	051-761-3951	국장: 도한영, 부장: 배성훈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국장: 김성아, 팀장: 정지은	전라·제주권		
경기·강원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고선휘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간사: 김정숙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최진숙
광명경실련	02-2614-1224	부장: 황은아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박미영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유병욱, 간사: 문은정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수원경실련	031-253-2266	국장: 고선영, 간사: 허경미	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최수진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이종준, 간사: 황규숙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김은정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주상윤, 간사: 변정혜	제주경실련	064-726-2530	팀장: 김은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여현정, 간사: 김은미			
양평경실련	031-772-7199	처장: 심한섭			
강릉경실련	033-645-0828	국장: 김경석, 부장: 김미정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춘천경실련	033-241-9486				